공공기관의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원희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기관 조직 전체는 마치 생태계와도 같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시대 상황에 따라 제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고, 사회의 수요에 따라 변화와 적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 의미를 분석하고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그러한 역할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 긴급하게 요구되는 주제에 대한 수시과제연구, 그리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상호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에서 2010년 『공공기관 동향』을 창간하여 2011년에 제5권까지 발간을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논단에 의한 '공공기관 이슈', 공공기관의 정책을 소개하는 '포커스' 그리고 국내외 공공기관의 동향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출판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13년 9월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KIPF 공공기관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시작해 현재 4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쟁점에 대한 토론, 기관장 인터뷰, 현장의 소리, 좋은 사례나누기 등 무게감 있는 공공기관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뉴스레터』라는 제호가 간단한 소식지로서의 의미로 전달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로 제호를 바꾸고자 합니다. 기존의 출판물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5호로 연장하여 출판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책동향과 연구동향을 강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과 관련한 어젠다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어 공공기관의 정책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큰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ontents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4. 05

Ⅰ 이슈 & Talk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 05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Ⅱ 전문가의 눈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기초정보부터 튼튼해야 ····· 17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철도 다음은? ····· 20
  왕규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 개혁,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 23
  이종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혁신은 민영화로 가능 ····· 26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Ⅲ 기관장 인터뷰

-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동반자 ····· 30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미래의 수산자원을 책임진다 ····· 39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Ⅳ 현장의 소리

- 세계를 선도하는 E-co Port 인천항 ····· 50
  윤재길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광산지역 환경복원 ····· 53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기술팀장
- 물 관리 패러다임을 변혁하는 K-water ····· 55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원장

Ⅴ 좋은 사례 나누기

- 자연과의 안전한 접속!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비스 ····· 58
  국립공원관리공단
- 소통과 협업으로 생동하는 일터, 차세대 전사 업무 포털(OASIS+)로 실현 ····· 64
  한국수자원공사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술과 경험을 융합해 최고의 집진장치를 만들다 ····· 74
  한국남부발전
-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대피 지도 시각화 서비스 ····· 78
  대한지적공사
- 유치원 정보공시, 학부모 실질 부담금 최초 공개 ····· 8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Ⅵ 정책동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90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104

Ⅶ 연구동향

- 공공요금 원가 검증의 의의와 과제 ····· 110
-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 외국 사례 연구 ····· 113
- 공기업 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 116

I 이슈&Talk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 이슈&Talk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좌담회입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 **일시 · 장소 :** 2014년 4월 18일 / KIPF 3층 소회의실
- **사　회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소장
- **참석자 :** 김　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지만(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준형(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
  하상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 **정　리 :**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쟁점 및 문제점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발전방향

1_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쟁점 및 문제점

라영재(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소장

사회자

공공기관은 민간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높고 연공급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의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 공공기관 경영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형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된 이후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이 삽입되면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16년부터 도입이 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올해부터 일부 기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정년이 연장된 경우 직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사무관리직이 많다 보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총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된 직원이 신입직원 수준의 임금을 받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의 임금을 낮춰야 하므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정년연장이 안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 계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좀 더 명확히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과 더불어 민간기관의 임금피크제 현황 및 현안에 대해 경총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하상우

최근 민간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2년 정도 남아 있으며, 일부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60세까지 정년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법조문을 해석하여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소위 '낀세대'와 일반세대 간의 노(勞)-노(勞)갈등, 임금피크제 도입 시 직무 재설계 문제 등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의 동의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요구되며, 최근 악화된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철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추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보수관리의 합리화지표'를 보면 이미 임금피크제 실시기관에 대해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고용문제 해결의 곤란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했습니다. 2013년 이선우 교수의 연구결과[1]를 보면, 조사대상인 25개 공기업 중 9개 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6개는 정년보장형, 3개는 정년연장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년보장형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정년까지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 부정적인 사례로 제시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숙련 노동자의 활용이라는 임금피크제의 주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년연장법에 따르면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6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우선 임금피크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되어 왔고 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이해와 평가 없이 제도 확대를 도모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1) 이선우·조경훈(2013),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3): 213-230.

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생애 총액임금입니다.

정년을 연장하여 재직기간이 늘어나도 기관의 인건비 지불능력만 있다면 추가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서로 다른 계정을 통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은 인건비 계정, 비정규직은 인건비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예 : 관리비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고정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건비 계정에서 지급하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정년연장에 따른 59, 60세 인력의 인건비 재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8세 근로자의 임금이 신입사원보다 3배가량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는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정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많은 인건비를 배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노사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최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_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발전방향

사회자

현재 300여 개 공공기관은 사업형태, 신규채용 규모, 근로자의 평균연령,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기관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기관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총액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여러 주체들 사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 입장의 타협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상우

공공기관의 사용자는 정부, 더 나아가 국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없이 단순히 총액인건비를 늘려서 정년연장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역시 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괴리가 클 때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필요성과 제도

의 효과가 없어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고, 경영진은 임기 내 노조와의 갈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

사회자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진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급노조나 기관 근로자들도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논리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가 복리후생 과다, 기관의 방만경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건비 일부의 절감 노력이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별도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무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사무관리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직무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력구조의 측면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관도 있고 정년연장 대상이 많은 기관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년연장 대상인원에 따른 기관별 인건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차별화된 기준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정부기관처럼 정부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성격을 갖는 공공기관도 있는만큼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년연장 시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는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할 것인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 철

정년연장법에서도 기관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씀드린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통제하여 지자체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 기준인건비제로 바뀌면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부 정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만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임금하락형으로 인건비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보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거론하는 것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의 본질을 벗어나 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상우

신규채용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채용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업의 영속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책임부분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인데,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방안이 없다면, 신규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근로자들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민간에 강제할 수 없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청년채용에 대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늘리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정부나 해당 공공기관 모두에게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어렵지만 임금피크제 제도 설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굴절 시점과 임금삭감률을 노사가 협력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임금총액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은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어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을 기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 60세로의 연장과 함께 근로자의 생애 총액임금이 늘어난다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부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총인건비 상승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간의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박준형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신규채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년연장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감을 갖고 해당 기관에 대해 연장된 기간에 한해서라도 정원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공공기관이 있는데, 총인건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신규채용과 정년연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개별 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총인건비 제약으로 인하여, 정년연장과 무관한 젊은 세대의 직원들에게까지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단순하게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면 인력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철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가 도입되어 지원기업과 대상인원, 지원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효과를 파악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정년보장형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상 임금이 하락하는 형태이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년 감축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나 제도 대상자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정년보장형은 정년연장형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의 수요 및 필요성 등이 공공기관과 유사한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비교하여 의견을 들어보면 공공기관이 차별적인 대책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상우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

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공공기업 모두 연공형 임금체계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고령자의 임금이 생산성 수준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기업도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평균임금이 민간기업보다 높고, 고용도 훨씬 안정되어 있으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서도 남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에 더해 받도록 단협에 명문화된 기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노조에서도 총액인건비제 등 불만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과도한 복지혜택과 관련한 조항들은 조정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준형

민간부문에서 조기 퇴직이 많은 현실이 오히려 '비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정년만큼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민간과 비교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금을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의 경우도 동등한 비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높아 임금수준이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봉제, 연공급제의 기본구조상 입사 초기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과거 낮은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통해 생산성 수준과 동일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 개인에게 형평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와 임금부분은 공공기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보다 높은 공기업도 있지만, 민간이나 공무원보다 낮은 준정부기관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임금을 통제받아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채용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관도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차별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지만

기관별로 수익구조, 정년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는 최적의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정년 60세 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한 임금피크제 설계를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임금피크제의 임금 조정률(예: 정년연장 기간 동안의 임금률 = 최고 임금 수준의 80%)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되는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설계 시 민간기업과의 임금조정률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청년들이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부문에 도전해야 합니다. 젊은층이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수준이 좋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도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형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은 기존 정년에서 늘어난 정년까지의 조정기간(2년)의 문제입니다(예: 기존 정년 58세 → 60세). 따라서, 신규채용이 줄어들거나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역시 늘어난 정년(2년)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계속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정년연장은 사회적 문제이므로 조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노조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사용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갈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년연장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관장은 정부 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상우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시각을 중요시한다면, 어느 정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민간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자는 물론, 기관과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자

해외(일본)에서는 임금체계, 고용구조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 힘들지만,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 역시 경제위기, 고령화 사회,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용어는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임금체계 개편, 정년관리, 고령자 관리에 대한 고민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은 힘들지만 교수님께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지만

일정 부분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피크제만을 시행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예산부족분을 임금피크제 비대상자들과 분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시니어 사원제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를 병행하여 임금을 낮추면서도 근로자가 받게 될 생애 총액임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임금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큰 흐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피크율 적용 등 세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시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 바라는 역할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 철

젊은층이 처한 상황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쏠림현상이 문제라면, 정부는 청년층이 민간부문에 도전하고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임원들의 높은 보수를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수준만 문제삼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에 있어서도 통제지향적인 지침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개별 기관에 맞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러한 방안은 노조에서도 수용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조를 걸림돌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로 인해 조정기간 동안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준형

공공기관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정 간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을 위한 인건비 부담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형식으로는 힘듭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로 지적된 사항들 역시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정부의 역할과 노동계에 바라는 점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용어 설명

❶ 연공급제[2]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서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 근속 · 학력 · 성별 등 인적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❷ 임금피크제[3] :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결정 방식으로 일정한 시기 이후 생산성이나 업무성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

- 정년보장형 :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게 됨
- 정년연장형 :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기간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노동력에 재투입하여 은퇴예정자(고령자)를 활용하는 것을 말함
- 고용연장형 :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

❸ 낀세대[4] : 위로는 이전세대의 권위에 눌리고 아래로는 386세대의 기세에 밀려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세대. 부모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를 의미함

❹ 총액인건비제[5] :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 보수 제도를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2) 미래와 경영, 『NEW 경제용어사전』, 2006.4.
3) 고성과직업장혁신센터,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 2009.
4)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 2006.
5)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2.12.

Ⅱ 전문가의 눈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기초정보부터 튼튼해야**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철도 다음은?**
왕규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 개혁,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이종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혁신은 민영화로 가능**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전문가의 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칼럼입니다.
각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기초정보부터 튼튼해야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현재와 같이 오류 투성이 회계정보에 근거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달성 목표를 설정하며 그 추진 실적을 파악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허경선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정보를 다루는 학문분야에서 흔하게 쓰는 용어 중에 GIGO(Garbage in, garbage out)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의미이고 우리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와 비슷한 의미이다. 즉,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면 그 시스템의 결과물 역시 부정확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이 떠오르는 용어가 바로 이 GIGO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은 공공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최근 공공기관 관리의 핵심정책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역시 이러한 공공기관의 현황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공공기관이 산출한 재무정보와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부채와 재무위험성을 산정하고, 방만경영 현황을 진단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점적인 정책수단도 정보의 공개이다.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공공기관의 재무정보가 틀렸다면 혹은 공공기관의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틀린 정보나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인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회계투명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검토하다 보면, 과연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회계투명성이란 높은 품질의 회계/재무

정보를 정보의 이용자에게 적시에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품질의 정보란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도 높은 정확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항목을 체크하다 보면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재무정보의 가장 기초인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당기가 아닌(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를 기록하는 전기오류수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2012년의 최근 4년간 전체 117개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34개 기관에서 총 92건의 전기오류수정이 발견되었으며, 오류보고금액은 약 1,508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매년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을 보고하여 무려 8건의 오류를 보고한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알리오시스템에도 재무정보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알리오 공시와 감사보고서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 본 결과 3개 기관이 감사보고서상 금액과 알리오상 공시금액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오류와 경영공시 오류는 국민에게 발표되는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왜 이렇게 잘못된 재무정보를 생산하고 있을까? 이유는 공공기관의 회계정보가 취합, 정리되고 내부적인 감독을 거친 후 외부의 감사와 감리를 받는 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내부적인 회계전문성이 취약하다. 전체 공공기관의 53.8%가 회계전문인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 고의적으로 회계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감독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공공기관 감사의 회계전문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감사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과반수이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내부 조직과 업무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공기업의 10%, 준정부기관의 60%는 비상임감사로 상임감사에 비해 더더욱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쉽지 않다. 외부감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95%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감사에서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을 받은 것은 외부 감사 도입 이후 3건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외부감사는 민간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감사 투입시간도 현저하게 적다. 저가 수임료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며 고품질의 외부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재무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는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공공기관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개선하여야 공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 회계불투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례의 대부분(46%)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세무조정 오류(20%)와 회계처리 오류(15%), 외부감사 관련(14%)된 사례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지만, 보석을 넣으면 보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법이다.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현재와 같이 오류 투성이 회계정보에 근거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달성 목표를 설정하며 그 추진 실적을 파악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회계/재무정보의 생산 및 감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 다음은?

전력 과소비의 한 가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전기 난방을 꼽는다. 이를 두고 '전기로 난방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왕규호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번 정부의 첫 번째 화두는 '창조경제'였다.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창조경제 다음으로 들고 나온 화두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면 먼저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면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의 정상화'도 '창조경제'처럼 두루뭉술한 추상적인 정치적 수사로 그칠 뻔했으나, 우리 사회의 특히 공공기관 분야의 비정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철도노조의 파업이었다. 파업 기간에 터져 나온 여러 모습은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만의 이야기였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철도만 비정상인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철도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자산과 매출 규모는 각각 약 20조원과 4조 8천억원이다. 반면에 전력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한전)의 자산과 매출 규모는 각각 약 96조원과 49조 3천억원이다. 코레일과 비교해서 한전이 자산은 약 5배, 매출은 약 10배 큰 규모이다. 철도와 전기 모두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기는 하나,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의 파급효과는 비교가 안 된다. 실제로 2011년 9월 11일에 발전 용량의 부족으로 강제 순환 단전이라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룬 적이 있다.

독점의 비효율성이 공공기관의 비정상 초래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모습은 다름 아닌 독점의 비효율성이다. 1982년에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스티글러(George Stigler) 교수는 독점기업이 향유하는 가장 큰 특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이윤을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나 그런 삼성전자도 끊임없이 혁신을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손놓고 편히 살다가는 어느 개그맨의 표현처럼 '한 방에 훅' 갈 수 있음을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높은 이윤을 얻는다. 여기에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기에 편하게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성 가져

독점의 비효율성에 잘못된 규제가 더해지면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 혹자는 전기가 '공공재'이므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싸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의 시장실패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가 과연 공공재인가?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과 특정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재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따금 볼 수 있는 불꽃놀이가 전형적인 공공재이다. 내가 본다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 과연 전기가 불꽃놀이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가? 한 사람이 전기를 쓰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사람이 전기를 쓰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전기가 없는 현대의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전기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재화이다. 그렇다고 전기가 공공재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음으로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싸다'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원가 이하로 싼 것이 문제다. 공기업이 원가 이하로 팔아 손해를 보면 정부는 당연히 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손실보전이 없으면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어린애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줄 수 있는 산타가 아니다. 그 손실 보전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저소득층도 구매할 수 있도록 원가 이하로 싸게 책정하는 것은 결코 싼 방법이 아니다. 적어도 요금은 원가대로 받고,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이다.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기인하는 또 다른 문제는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전력 위기이다. 전력 위기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소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 전력 과소비의 한 가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전기 난방을 꼽는다. 이를 두고 '전기로 난방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하는 것과 같다'고 표

현하기도 한다. 생수로 빨래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회적 낭비이다. 그러나 생수 가격이 수돗물 가격보다 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 놓고 단속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경쟁 도입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과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 원인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원가 이하의 요금에 기인하는 것은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반면에 방만한 경영 등 독점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필자는 2002년 월드컵이 경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연,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주문하였다. 그 결과 어떤 선수들은 쓸쓸히 퇴장한 반면, 어떤 선수들은 경쟁에서 이겨내어 부와 명예를 얻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해 여름 축구를 보면서 정말로 행복했다는 것이다.

경쟁 도입은 소비자가 재화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철도의 경우 지극히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수서발 KTX의 운영을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의 경쟁이 도입되었다. 전력분야도 소매 경쟁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전기도 골라서 사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최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공기업이 독점으로 있는 많은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기관 개혁,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개혁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종수 교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3년 후 퇴임 시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면서 밝힌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 개혁과제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이다.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정상화 개혁'은 그 초점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의 부채 가운데는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정부 각 부처는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인식에 발맞추어 지난 연말부터 공기업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억제를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권위 있는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헌 처방전 새 잉크로 고쳐 쓴 공기업 혁신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공기업 사장 연봉 삭감과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높은 기관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解任) 건의하겠다는 큰소리를 빼면, 뭘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그러나 어떻든 공기업 개혁에 대한 현 정부 고위관료들의 결의는 대단한 것으로 느껴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기업의 불합리한 복리후생 수준과 방만 경영을 단호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제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회구성원들은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 초기 현란한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 부르짖은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과거의 경험도 그렇지만, 공기업 개혁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권-관계부처 공무원-공기업 노동조합] 등 관련 집단들의 비협조와 방해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개혁은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책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접근과 다르다고 하겠다.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소홀한 관리감독 책임이 거론되는 점들이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개혁 방안 가운데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지엽·말단적인 해결책만이 제시되는가 하면, 또한 다른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집권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마지못해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언론이 사설을 통해 "정부가 '공기업 낙하산' 자격 기준 만들 자격 있나"고 반문했듯이,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비롯된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공공기관장추천위원회를 아무리 합리적으로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적 식객들에 대한 논공행상 대상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개혁 방안도 소용없다.

공공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개혁 필요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관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처분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1인당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 방만 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도 필요한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정된 조치들 만으로 공기업 개혁을 끝내서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다. 정치권과 관료집단, 그리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 집단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공공관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의 얼개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영화로 가능

공공기관 혁신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을 최대한 민영화하는 길이다. 즉 경쟁 무풍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경쟁지대로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현진권 원장
자유경제원

공공기관의 혁신은 모든 정권이 주기적으로 강조하는 단골책이다. 반복적인 혁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공기관 혁신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근본 방향에 대한 사고혁신이 우선 필요하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혁신을 투입과 산출 간 관계로만 접근하였다. 즉 투입요소 대비 산출량을 통해 비효율성을 질타하였다. 이들 요소들간 관계를 결정짓는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도 비효율의 주된 요인으로 비판되었다. 이러한 평가법은 민간기업에는 적응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에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경쟁 메커니즘이 민간기업에는 작동하지만, 공공기관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경쟁환경에 있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 간 효율성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작동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경쟁이 없는 환경이므로, 스스로 개선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입 대비 산출이 낮다고 해도, 공공기관의 퇴출은 불가능하다.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 입장에선 스트레스 없는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 혹은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한다.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공공기관 비효율성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통한 국민들의 경제부담은 높아진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효율 증대를 혁신이란 이름으로 추진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지, 외부에선 알 수 없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 혁신은 외부에서 아무리 평가, 감독, 비판해도 의미가 없다.

공공기관 혁신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을 최대한 민영화하는 길이다. 즉 경쟁 무풍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경쟁지대로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에서 민영화 정책방향은 나쁜 정책이고,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효율적 공공기관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 경쟁논리 속에서 효율 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국민세금의 투입이 없으므로, 그만큼 좋은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기관으로 남으면 좋은 정책이고, 민영화하면 나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 뿌리 깊은 역사적 인식구조와 관계가 깊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체계에서는 공익은 좋은 것이고, 사익은 억누르려야 할 대상이었다. 사익은 소인배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선비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구조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보편적인 논리가 '공공성' 강조다. 주변의 많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그들이 맡고 있는 영역에 대해 공공성을 주장한다. 주택, 방송, 예술, 교통, 교육, 보육 등 많은 분야에서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성 논리의 기조에는 정부에서 해야 하고, 민간이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재정학에서는 공공성이란 추상적인 용어를 '공공재(public good)'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배타성과 경합성이란 두 가지 특성을 통해 공공재를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재 이론은 매우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재 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는 공공재뿐 아니라 사유재도 있으며, 또한 민간에서 제공하는 재화도 공공재와 사유재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방송은 공공재이지만 민간기업인 SBS 방송국이 존재하며, 보육은 사유재이지만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재보다도 훨씬 추상적인 용어인 공공성이란 개념을 통해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논리로 사용한다.

공공기관 혁신방향, 민간위탁과 민영화

공공기관의 혁신방향은 민영화뿐이다. 민영화는 두 가지 형태의 접근법이 있다.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되, 해당 재화의 생산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으로, 완전한 민영화이다. 우리는 민영화하면 완전한 민영화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민영화는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되, 생산주체는 민간이 되는 부분적 민영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정치가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을 들 수 있다. 이들 지도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을 보는 시각

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 간 비효율 관계로만 봤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 여부는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정부 대신 경쟁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게 했다.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혁신방향에 대해 사고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Ⅲ 기관장 인터뷰

■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동반자**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미래의 수산자원을 책임진다**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 공공기관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인터뷰**는 신설기관,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 소개와 더불어 기관장의 기관 운영에 관한 비전과 철학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일류의 소상공인 · 시장 서비스기관이 되겠습니다

|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정리: 박미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이일규 이사장 ·

• 학 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1972)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MBA)(1977)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 박사(2004)
- 스탠포드대 디자인경영과정 수료(2007)

• 경 력

-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2014)
- 한국디자인경영협회(2009)
- 한국디자인진흥원장(2006)
-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2004)
- 기술지원국장, 창업벤처국장(2001)
- 통상산업부 뉴욕상무관(199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구)소상공인진흥원과 (구)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공단의 역할과 기능, 주요 사업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구)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구)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발족된 기관입니다. 양 기관의 유사사업과 조직은 통합하고, 고유사업과 조직은 특성화하여 소상공인 · 전통시장 융합 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통합 이후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연구 · 조사,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 통합으로 인해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습니다

비스가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4본부, 3실, 10부, 11개 지역본부, 62개 지역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 간 동일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동일 고객에 대한 지원 업무의 분절성이 해소되는 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과 컨설팅' 입니다. 원래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생긴 개념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규정 시, 업종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모두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 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밀집해 있다는 특이성을 지닌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한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 조사' 부문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해 소상공인 경기 동향조사를 하는데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하면 1,500여 개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경기 동향조사를 할 경우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에 대한 '홍보' 부문입니다. 기관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예산과 다른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을 극복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다 보니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고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원기관이 헷갈리지 않는 등 통합의 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 지혜가 풍부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한국디자인경영협회 이사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으신데요, 통합한 기관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경영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취임한 지 이제 100여 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통합한 기관이 서로 융합하여 통합의 효과를 누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

> 공단의 재정적인 지원은
>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의 경영역량
> 강화와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 지원할 예정입니다

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물리적으로 통합은 되었으나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다시 분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의 통합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은 통합으로 인한 이점이 더 많은 기관입니다. 그 이점을 충분히 살려 소상공인과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대 사업, 소상공인 대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 대기업 등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과 협업을 적극 도입하여 창조적인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이라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고객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시절 고객만족도 평가를 최하인 'D'에서 'A'로 끌어올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일류의 소상공인 · 시장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목표는 스스로 경영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흔히 하는 얘기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고기를 잡는 도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금전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현금보조라는 제도에 내성만 생기고 효과가 별로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조 · 근면 운동'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원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을 예로 들면, 상인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에 지원을 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인회의 조직화율(해당 시장의 모든 점포 중 시장 상인회에 가입한 비율)과 회비 납부율(상인회에 가입한 점포 중 실제로 회비를 납부한 점포의 비율)이 최소한 90% 이상을 넘는 시장을 중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가 공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초기 예산 투입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할 전통시장을 선정 시 '조직화율'이라는 기준의 배점을 작년까지는 10%였던 것을 올해는 20%로 끌어올려 가중치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사장님께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현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성장기반 조성, 협동조합 활성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창업학교 · 경영학교'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과 기창업자의 매출 증가 및 경영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1:1 지도해주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교육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24시간 자체 채널인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최신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과잉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예방하고자 지역별 · 업종별 종합적 상권분석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및 동업종 및 이업종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촉진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고자 동

네슈퍼의 경영 현대화를 목표로 기지원된 1만개 '나들가게 사후관리와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업무로는 남녀노소에게 매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ICT 도입, 상권활성화 등 전통시장에 특화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장보기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130여 개 시장을 대상으로 ICT 카페 조성, 전통시장 내 1천개 점포 모바일 POS기 설치, ICT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ICT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별 시장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상권을 연계 활성화하여 문화 · 테마거리조성,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마케팅, 명절TV광고, 우수시장상품전시회 등 다양한 '전통시장 마케팅 · 홍보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및 이용 촉진을 유도하고 전국 1,250여 개 시장 내 약 17만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 중에 올해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지원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뚜렷한 사업목표를 갖고 하나의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업종에 구분 없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지원의 가장 큰 목표는 '자생력 확보' 입니다. 283만 소상공인은 지역 · 업종 · 규모별 다양한 특성과 다수의 창업 및 폐업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계형 소상공인이 82.6%에 달하고, 실질소득이 월평균 187만원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과 조직화 · 협업화로 공동의 역량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사업은 초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간 협업을 유도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553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하였는데, 소상공인의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발생하는 부작용은 해소해 나가면서 올해는 400개의 협동조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

〈협동조합사업의 지원분야별 지원한도〉

지원분야	분야별 지원한도	총한도 금액 (2014년)
① 공동브랜드개발	2,000만원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자부담 20% (단, 공동장비구매는 2억원 이내, 자부담 30%)
② 공동마케팅	5,000만원	
③ 공동작업장임차	1,000만원	
④ 공동기술개발	3,000만원	
⑤ 공동네트워크	2,000만원	
⑥ 공동장비구매	2억원	

며,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2~3년 후에는 성과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5년간(2013~2017년) 총 2천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ICT 도입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전통시장 고유의 '전통성'을 가지고 가야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ICT화시킴과 동시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ICT와 디자인 개념이 융합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인데,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모델개발 및 사례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은 수도권, 중부, 남부로 지역을 나누어서 3개의 사례를 만들고, 나들가게 혹은 골목상권과 같은 일반 소상공인은 100여 개 정도의 표준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경영악화 위기에 처한 동네 슈퍼마켓을 살

리기 위해 2010~2012년, 3년간 동네 슈퍼의 상품진열과 손님맞이에 대한 컨설팅, 간판 설치, 실시간으로 재고관리를 하기 위한 POS 설치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1만개 나들가게를 육성하였는데 올해는 나들가게의 사후관리와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정부가 아무리 많은 사업들을 해도 국민이 모르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실제 이용의 활성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공단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단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실제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만 그 사업이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 국민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 부문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24시간 자체채널인 '소상공인방송'을 운영을 통해 매일 다양한 소상공인 이슈와 사업을 소개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 유관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라이브(월 3,000회), 신한은행(월 120회), 하나은행(월 600회), 문화관관형시장(월 60회) 내에 설치된 TV를 통해 소상공인방송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방송 출연업체를 대상으로 기념액자를 제작 · 배포

하여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방송의 시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종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전 국민 대상 공모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중 기획 · 실시하는 등 홍보기능 강화에 힘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경품이벤트(1.13~2.14)', '전통시장 인증샷 및 아이디어 제안(1.20~2.14)' 등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했고, '소상공인방송 슬로건 공모(4.16~4.30)',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4.8~5.9)' 등 고객 참여와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예정중입니다.

또한 현재 홍보담당부서인 홍보 '팀'을 홍보 '실'로 격상시켜 기존에 각 사업별로 실시되었던 홍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에 취임하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위하여 '직무기술서'를 받아 보았더니 '홍보'가 중복되는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업별로 홍보채널

을 다르게 하다 보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 홍보부서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홍보채널은 지역조직망의 활용입니다. 전국에 62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거의 모든 중소도시에 다 포진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지역의 상권에 대한 분석자료 및 지역의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업무에 대한 홍보를 계속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의 지원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고객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객의 범주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공단의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홍보라든가 정책전달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예비창업자 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할까요.

창업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먼저 '창업진흥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공단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인데, 이를 4월 중순부터 전국 100개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창업학교는 실전창업 95개 과정, 업종전환 151개 과정을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창업자의 탄탄한 준비를 도울 수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내용을 신문 · 방송 · 간행물 · 행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예비창업자에게 다가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매년 '신사업 아이디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주요 상권을 분석한 '상권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예비창업자에게 취약한 법률 정보를 소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홍보부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정상화 방안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취임할 당시, 지방의 지역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수준 미만일 정도로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해서 바로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저희 공단과 같이 보수 및 복리후생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책이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큰 사업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단은 이를 실천하고자 '소상공인 · 전통시장 서로돕고, 엮어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유관기관, 업종단체,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공단이 주도적으로 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엮어줌으로써 소상공인과 시장상인의 경영활

> "공공기관의 정책이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큰 사업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을 장려해주어야 합니다"

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본부별로 하나의 공간을 확보해서 소상공인과 관련자들을 초청해 한자리에 모이게 한 뒤, 현장에서 서로돕고, 엮어주기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연을 엮습니다. 현장에서 해결되는 건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으나 공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경우 공단이 연계해 줌으로써 좁게는 같은 지역 안에서, 넓게는 전국적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 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2월 22일 경기지역본부(경기 광교산, 120여 명)를 시작으로, 3월 15일 부산 · 울산지역(부산 금정산, 140여 명), 3월 29일 충북지역(청주 상단산성, 170여 명), 4월 12일 대전 · 충남지역(대전 계족산, 260여 명)에서 행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1개 지역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처음 자리만 마련해 주면 행사 참여자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 · 확대시

켜 나갑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연계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사업 위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현재 평가 시스템에서 비예산사업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이사장님처럼 직무분석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기관장은 처음입니다.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현재 변화 속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장 적합한 기관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선이 여러 개이지만 플랫폼(Platform)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을 서로 엮어 서로 돕게 만드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기대해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무기관	중소기업청	기관유형(평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관장(임기)	이일규(2014.01.01~2016.12.31)
소재지(대표전화/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라 2층 (042-363-7700/ www.kmdc.or.kr)			경영자율권 대상 여부	-
설립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4			설립연도	2014년 01월
설립목적	•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함				
주요연혁	• 1999년 02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 10개, 지방중소기업청 운영) • 2005년 03월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 2006년 01월 소상공지원센터 운영권 지자체 위임 (지방중소기업청 → 시도지사) • 2006년 05월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 2010년 07월 시장경영진흥원 전환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 2011년 08월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58개) 통합 • 2012년 01월 24시간 자체채널 소상공인방송 yestv 개국 • 2014년 0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족 * (구)소상공인진흥원, (구)시장경영진흥원 통합				
주요기능 및 역할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 교육 지원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 · 조직화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 정책개발 등				

“풍요로운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

* 정리: 박미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강영실 이사장 ·

• **학 력**
- 부경대학교 졸업(1982)
- 부경대학교 해양생물학 이학박사(1992)

• **경 력**
- 現,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2014)
- 서해수산연구소장, 연구기획부장(2012)
- 국외훈련 파견(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2010)
- 동해수산연구소 소장(2010)
-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과 등 6개과 팀장(2002)
-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과 등 5개과 수산연구관(1989)

2011년 ‘수산자원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12년에 현재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공단으로 출범한 지 3년 여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공단의 역할과 기능,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해양수산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합관리하고자 2011년 1월 1일에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공단은 ‘풍요로운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 바다목장 ·

> 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 바다목장 · 바다숲 · 인공어초 · 수산종묘
> 등의 시설사업과 수산자원 관련
> 기술개발 및 적지조사, 효과분석 등의
> 연구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바다숲 · 인공어초 조성과 종묘방류 등의 사업을 통해 바다의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그러한 공익적 생산물인 수산자원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수산자원'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공단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은 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수산종묘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적지조사, 효과분석 등의 연구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 · 대행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사 1본부, 1단, 6실, 지사 1연구소, 4지사(8실, 3사업소)로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서는 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해 · 서해 · 남해 · 제주에 있는 4개 지사의 '사업소'에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수산종묘사업과 같은 기존의 사업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신규 사업으로 하구어장에 관한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새만금 지역인데, 내년부터 '3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이 종료하면 그 뒤에는 낙동강-섬진강 지역으로 하구어장에 대한 관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해양생물학을 전공하시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산 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다가 올해 초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관련분야이긴 하지만 '기관의 장'은 연구자와는 다른 영역인데 앞으로 어떤 경영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수산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책임감과 부담감이 큽니다. 공단의 설립이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사명감 역시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공단이 그간 추진해 온 여러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국민과 어업인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 전문성 · 열정 · 화합을 핵심가치로 두고
> 소통에 근거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내실을 다지고 근본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공단에 취임하면서 생각한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만들어 진다면,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만들 때, 부서 간의 '소통'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통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경영방침입니다.

또한 저희 공단의 핵심 가치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에 있습니다. 어장생태계 복원을 활성화하고 수산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며 핵심기술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수산자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 수산 전문인으로서의 열정과 조직원 간의 화합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관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제도를 정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간업체와 협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와의 관계 구축에 대한 체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만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설 사업자 선정–예를 들어, 인공어초 생산업자 혹은 시설설치 사업자 등–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업들이 공단의 수산자원관리 · 조성사업의 확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사업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공단과 공단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 공단을 '수자원공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관이 외부 사람을 만났을 때 10명 중 7~8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업과 그 성과들을 근거로 하여 공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바다목장은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현

재는 인공구조물 투하 등의 공단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바다숲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사업으로 해외 전파를 위해서 수산자원 분야의 해외 공적 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여수에서 열리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총회'에서 세계 최초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저희 'FIRA'의 '바다식목일(Marine Gardening Day)'과 '바다숲'에 대해 알리고자 총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여 공단에 창조적인 조직바람을 불어 넣고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방침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공단이 수산분야에 독보적인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공단이 현재 수산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다목장 · 바다숲 · 인공어초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사업의 개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목적성은 수산자원이 가지고 있는 '공유자원'이라는 고유한 특질에 기인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수산자원은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지만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이 불확실하여 자원의 고갈과 오염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민간과 같은 개인 단위에게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또한 해당 지자체의 관할하에 있는 바다와 마을어장은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방류사업은 지자체에 직접 책정되는 예산의 비중이 높은데, 이 경우 해당 지자체 소속의 어장에 정착할 수 있는 전복류와 같은 수산자원만을 방류할 뿐 지자체의 예산으로 방류해도 지자체가 거둔다는 보장이 없는 회유성 어종인 참조기, 명태, 연어 등의 치어는 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류사업의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도 못할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수산자원의 다양성이 상실되어 결국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국가적 관점에서 조정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 공단이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성을 가진 바다의 외부효과가 큰 만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다목장 · 바다숲 · 인공어초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사업과 같은 초기 작업을 국가의 위탁으로 공단이 수행하고

> 바다목장 · 바다숲 · 인공어초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사업은 육상에서의 도로 · 철도시설 정비와 전력생산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입니다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목적입니다. 국가가 육상에서 도로나 철도시설 정비 및 전력생산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주었듯이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육상의 그것과 같은 작업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다목장은 연안에 인공구조물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대량 방류하여 대상 연안어장의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육상에서도 목장하면 주로 소나 젖소 등을 키우는 것을 일컫듯이 바다목장 또한 육상과 동일합니다. 바다목장이라 함은 울타리는 치지 않더라도 바다에 어류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바다에 인공적으로 물고기 아파트를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휴식공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이까지도 제공해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다목장은 이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용관리 체계를 적용해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어업 생산 ·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바다목장은 시범 바다목장사업에서 축적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해역에 총 50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2~5개소를 착수하여 2013년에 12개소(강릉, 거제 학동, 고군산, 서귀포 성산, 보령, 군산 직도, 사천, 신안(조기종료), 옹진 연평, 속초 기장, 서귀포 강정)를 완공하였고, 추가적으로 고성을 포함함 총 24개소(2040억원)의 바다목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안어장의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다목장과는 달리 바다숲은 연안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현재 해조류가 고사하는 바다사막화(갯녹음 혹은 백화현상)현상이 제주 연근해는 35%, 동해안은 2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오 · 폐수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바다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바다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다숲은 콘크리트 패널을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인 곳에 놓고 노끈으로 해조류를 고정시켜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육상식물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는 것처럼 해조류도 자라나게 됩니다. 이는 산에 숲을 조성해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바다 속에 해조류를 이식 및 번성하게 하여 바닷속을 푸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국 연안 마을어장 내 갯녹음이

> 바다목장은 연안에 인공구조물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여 대상 연안어장의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심화된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였는데, 2013년까지 47개소, 면적은 3,334ha에 이릅니다. 이식(移植)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수심, 저질, 수온, 주변 서식생물 분포 등을 사전 조사하여 적정 품종을 선택하는데, 선택된 품종은 주로 감태 · 모자반 · 미역 · 대황 · 곰피 · 다시마 등입니다. 암반지역 중 모래가 유입되었거나 기타 해조류 부착기반이 취약한 해역에 해중림초를 설치하는데, 해중림초는 십자형해중림초 · 터널형어초 등 5종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식한 해조류는 보통 길이 1~3미터가량이 자라나는데, 이렇게 되면 어초 아래로 그늘이 생겨 어류가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바다숲은 바다 사막화로 황폐화된 연안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물고기들의 산란지 및 서식지를 제공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다숲 조성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수가 조성 전에 비하여 약 120% 증가하였고, 생체량은 약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원래 동해안이 도루묵이 많이 잡히던 지역이었는데 수확량이 감소하다가 바다숲 조성 1년 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으로서는 도루묵 수확량의 증가가 바다숲 조성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장한 해조류는 CO_2를 흡수 ·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해조류로부터 바이오 물질을 추출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 에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조류는 그 자체로도 건강한 먹거리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바다숲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장의 조기 복원을 가능하게 할 저비용 · 고효율의 다양한 바다숲 조성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 패널부착식 등 저비용 조성방식의 도입을 확대하려고 하며 기존 바다숲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이식 대상 품종, 이식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산자원 회복방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원회복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류종묘에 대해서는 고유형질 및 유전적 다양성 유지, 전염성 질병예방 · 관리 등을 통해 건강종묘 생산 · 방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시기 · 크기 · 장소에 방류함으로써 방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 · 화학적 표지방법 이외에 친자확인 등 첨단 유전학 표지방법 등을 개발 ·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방류사업 효과를 증명함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 공공성을 가진 바다가
>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 회유성 어종 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그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으로는 건강종묘 자체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하여 양양 · 완도 등 4개의 종묘사업소 시설을 활용하고 회유성이 강한 품종의 건강종묘 생산 · 방류 및 어미를 양성하며, 꽃게 · 참조기 · 쏨뱅이 등의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양양 남대천 등 전국 10개소에 어린 연어 1,500만 마리를 방류하고 토속어종인 산천어 자원회복을 위한 서식지 생태환경 조사 및 치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조기 등 소비자 선호 품종에 대한 종묘생산 및 방류기법 등의 보유 기술을 민간이나 지자체에 이전하고, 건강종묘 생산을 위한 어미 양성 · 관리기술을 제공하며 기후변화 · 국민 선호도 조사로 미래 수요가 증가할 품종을 예측하여 해당 품종 종묘생산의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외부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바다' 라는 자연 속에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태적이며 변동성이 많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는 S자 형태로 증가하며 극치상태를 지나면 증가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전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지의 개념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이 가진 특성을 잘 인지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기적 효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꾸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보니 연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지자체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우리 공단의 주 고객은 지자체, 어민 등으로 지자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목장과 같은 경우 매칭펀드로 정부가 50%, 지자체가 50%의 예산을 책임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 확보 노력이 전제되어야만이 바다목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설치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바다숲은 조성 3년 후에, 바다목장(시범바다목장을 포함)은 조성 5년 후에 지자체로 운영 · 관리가 이관됩니다.

공단은 지자체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수산관련 전문가로서의 도움이 요구될 때 바다목장이나 바다숲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형태이므로 지자체와의 원활하고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발맞추어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업무절차는 물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과제 등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 등을 포함한 공단의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사회의 구현과 상생의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 열린 소통 채널을 통해 서로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단순한 식량공급 차원이 아닌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하여 관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수산자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대중의 관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4년 홍보팀을 신설하여 홍보팀을 중심으로 공단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방송광고, 기획방송 등 기획홍보를 강화하여 수산자원과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 연령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단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 및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녹화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바다식목일-Marine Gardening Day'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다식목일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UCC 공모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다식목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 확보를 통해 바다와 수산자원, 그리고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5월 이후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식목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바다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육지에서의 식목일 개념과 용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바다에도 육지의 나무와 같은 해조류를 심는 행사를 통해 바다생태계 관리와

수산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매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미역 같은 해조류의 포자(씨앗에 해당)는 매우 작고 가벼워서 포자만 바다 속으로 던지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 포자가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안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녹말과 같은 유기물과 해조류 포자를 섞은 뒤, 바다 속으로 던져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기물은 녹고 해조류 씨앗은 바다 속에서 제대로 안착해 해조류가 자라게 됩니다.

또한 바다를 단순히 수산업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산업의 발전 측면과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생산 시설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관광, 교육, 낚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국민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산자원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고자 합니다. 바다목장 사업 이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해당 해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바다목장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바다목장을 조성했는데, 울진은 지리적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해상낚시터를 만들었고,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바다 속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역·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테마형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어업과 관광, 레저가 융·복합된 신개념의 맞춤형 자원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자원의 생산과 더불어 유통 및 레저·체험까지 연계한 수산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과 레저를 통해 일반국민의 수산자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방만 경영의 문제가 있는 곳은 일부이지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전체 공공기관이 그러한 이미지로 인식됨으로써 얻는 손실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일부 문제가 있는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전체 공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의 앞에 '공공'이 붙었다는 것은 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업 부문 종사자가 너무 영세한 규모인지라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수산 종사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어도 바다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산자원을 증가시키고, 수산물 브랜드 사업화를 통해 소득보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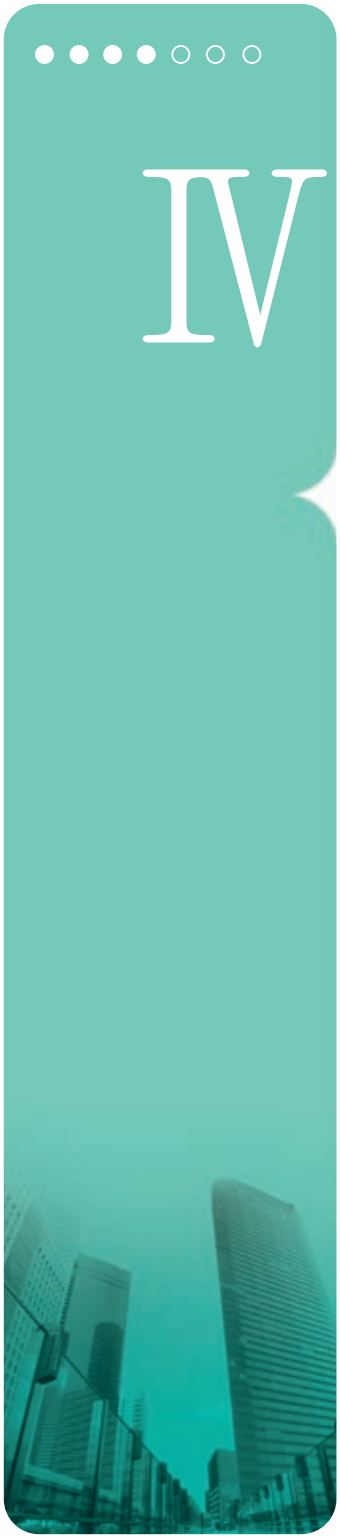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에 대한 사명감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저희 공단 또한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리더가 열정이 있으면 기관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관이고 수산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또한 많아서 일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사장님처럼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분이 기관의 장이신 만큼 공단이 수산자원 분야에서 'Life Cycle Manager'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점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기관유형(평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강소형)	기관장(임기)	강영실 (2014.1.27 ~ 2017.1.26)
소재지(대표전화/홈페이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19층) (051-742-3391 / www.fira.or.kr)			경영자율권 대상 여부	-
설립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 55조의 2			설립연도	2010년 11월
설립목적	•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 개발 ·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주요연혁	• 2010년 11월 법인 설립 허가 (농림수산식품부 제543호) 및 등기 • 2011년 01월 수산자원사업단 출범 • 2011년 0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고시 제2011-1호) • 2011년 07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인명칭 변경) • 2012년 01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법인명칭 변경				
주요기능 및 역할	• 인공어초 · 바다숲 · 바다목장 조성 및 건강종묘 방류사업 • 수산자원관련 기술개발,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 연구사업 •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및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 • 국가 · 지자체 등의 위탁 · 대행 사업 등				



Ⅳ 현장의 소리

■ 세계를 선도하는 E-co Port 인천항
윤재길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광산지역 환경복원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기술팀장

■ 물 관리 패러다임을 변혁하는 K-water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원장

* 현장의 소리는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실상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칼럼입니다. 각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세계를 선도하는 E-co Port 인천항

윤재길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yjg8793@naver.com)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 증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세계 각국은 생태적, 환경적 측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항만들도 유통거점 항만과 더불어 환경 친화적인 항만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항만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항만 조성

세계 55개 항만은 '세계 항만기후선언(2008. 7)'을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항만, 내륙운송 부분의 탄소배출 저감 실천을 합의하였다. 또한, 항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항만국제기구를 설립하고 항만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 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롱비치 항은 Green Port의 일환으로 '클린 에어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고 75% 감소시키고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23% 감축시켰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만산업시설 간 폐열·폐냉을 교환하기 위한 배관망 구축사업'과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Green 선박 인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환경문제 개선에 있어 선도 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항은 육상수송보다는 해상 환적화물에 의지하는 도시국가의 특성상 태양 및 풍력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항만 조성보다는 항만을 선박을 규제하는 'Green Ship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연료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선박설계를 채택한 선주에게 선적 등록세 50% 감면, 연간 톤세 20% 환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2010년)하였으며, 각 산업별,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2010년)하고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항만구축, 재해안전형 항만구축, 친수친환경형 항만구축, 자원순환형 항만구축" 등 4가지 유형별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선진항만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친환경 항만 및 선박을 위하여 항만내 신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발전시설 도입, 저탄소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친환경 선박 시험·인증·표준화 시스템 구축, LNG연료 추진선박 기준 개발, LNG 벙커링 등 핵심기술 개발"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시행하고 있다.

Green Port 구축 필요성 대두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및 감축 의무화, 항만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 증가, 국내외 항만 간의 친환경정책 경쟁 심화 등으로 인천항에서도 Green Port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환경 친화적인 항만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 동향 및 현황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부문, 환경관리 부문,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공간 부문, 에너지 자립 및 자원순환 부문 등 14대의 세부전략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E-co Port 인천항'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E-co Port 인천항' 구축은 단순히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절감을 넘어서 항만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 및 시민사회와 조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인천항은 현재 빠르게 녹색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2013년에 인천항만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친환경 항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내항 임항창고의 지붕경사면(70,000㎡)에 태양광 시설(4MW) 설치·운영하여 연간 1,270MWh의 전략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574t을 저감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LNG 홍보선 에코누리호를 건조해 운영 중이다. 에코누리호는 기존 디젤 대신 LNG연료를 사용하여 기존 디젤에 비해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92%, 분진 99%, 이산화탄소 23%를 덜 발생시킨다.

앞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를 하역할 때 쓰이는 야드 트랙터를 전기로 구동시키는 무선 전력전송 야드 트랙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야드 트랙터를 전기로 바꿈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적 등의 정차시간에 무선으로 충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송도 LNG 기지와 연계하여 기존에 버려지던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창고 건설을 검토 중이다. LNG는 -162℃에서 보관되지만 이를 운송할 때는 0℃로 온도를 높여야 되고,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냉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냉동·냉장창고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지만, LNG의 냉열을 이용할 경우에 낮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냉동·냉장창고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정박한 선박의 엔진 공회전 방지용 육상전력 공급 장치 설치 ▲재래식 컨테이너 하역크레인의 동력원 변경(경유→전기) ▲고효율 LED 조명 교체로 전기사용량 감축 ▲LED 차막이 설치로 선박 이·접안 안전 확보 ▲상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 ▲사료 부원료 및 석탄 등 비산먼지 점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E-co Port 인천항'을 구축해 환황해권 선진 항만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광산지역 환경복원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기술팀장
(jslee@mireco.or.kr)

한때 대한민국 산업개발의 중추를 담당했던 광업은 그 영광의 자리를 다른 산업에 내어준 지 오래됐다. 광업의 사양화에 따라 붐비던 광산촌은 인적이 드문 낙후지역으로 변모되었고 광업에 의존하던 지역경기는 급속히 쇠락하였다. 지역경기 황폐화 외에도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환경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 및 토양오염, 지반침하, 폐석방치 등의 환경적 피해를 광해(鑛害)라고 부른다.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의 광업은 오염된 자연환경을 되돌리기 위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서 하던 광해방지사업은 특별법의 제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 전문기관인 광해관리공단 설립(2006년 6월)으로, 체계적이고 꾸준히 진행되어 이제는 과거 광산 개발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곳도 많다.

광해방지사업의 해외진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수년간 정부는 산업개발의 근간이 되는 중요자원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치열한 해외 자원개발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원 착취식 광업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자원개발의 모델로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탐사단계에서부터 폐광에 이르기까지 예상 가능한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자원부존국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광해관리의 국제표준 지정

산업기술의 표준은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시장주도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산업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송배전시스템 및 전력 통신망 등), 독일은 전기자동차(충전 방식 및 연비 측정 방식 등),

중국은 무선랜(확장성 개선 및 분산처리 기술 등) 국제표준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국 기술 국제표준화를 10대 국가정책으로 책정하여 추진중이다. 우리 정부 또한 '세계 7위권의 국제표준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국내 광해방지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광해방지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며 그 근간은 국제표준제정의 주도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광해관리 분과위원회 설립 승인 및 한국의 간사국 수임은 한국의 광해관리에 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이 지닌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제

그간 광업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주로 독일,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이 선점해 왔다. 한국이 광해관리의 국제표준화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선진국의 견제를 막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과의 공조를 확대하는 등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운용의 묘를 십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은 광해가 무엇이지, 광해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고 있다. 나아가 광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광해관리의 국제표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또한 관련 분야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계 및 학교,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광업 종사자들과의 협업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광업을 저해하는 광해관리 표준화가 아니라 광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광해관리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광업과 광해관리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물 관리 패러다임을 변혁하는 K-water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원장
(hjkoun@kwater.or.kr)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와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 등으로 인한 물 재해의 증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과거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로 인해 같은 나라에서도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강우의 이상패턴으로 기존의 물 관리방식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 관련 인프라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도심 홍수를 초래하고 폭설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경상북도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반복되는 가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왕에 확보된 물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등 국가 차원의 '수원(水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K-water는 수량 · 수질 ·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IWRM)'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들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여유 있는 지역의 물을 지역 간 재배분하기 위한 수리권 조정과 법 ·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물의 수요 · 공급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도록 물 관련 기관 간 물 정보를 공유하고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는 대체 수자원 개발과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가뭄과 홍수예측 시스템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K-water의 'Smart 신 경영'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물 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K-water는 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Smart 신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신 중 · 장기 전략경영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내 · 외 물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천과제로는 인체에 건강한 물 공급, 통합 물 관

리 실현,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녹조(綠藻) 현상의 주도적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Smart 신 경영의 내용은 첫째, '미래 물 관리를 선도' 하는 것으로 K-water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넘어 '인체에 건강한 물 공급' 으로 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상수원(上水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간 물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물 복지 실현' 에 앞장 서, 특히 도서지역 · 농어촌지역 등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깨끗하고 인체에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셋째, '고객 눈높이 경영' 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투명한 공기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불합리한 관행 폐지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의 강화이다. 특히, '주민 동의 없는 댐 건설은 없다' 는 선언을 통해 댐 건설과정에서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Smart 신 경영' 의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만성적인 물 문제를 책임지는 K-water

그동안 다수의 물 관련 기관들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물 문제를 앞으로는 K-water가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물 문제의 하나인 녹조(綠藻)의 경우, 그동안 법적 기능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K-water가 녹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녹조 원인 조사, 오염원 제거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주도하고, 녹조 발생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목적댐과 보(洑)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사전에 방류하며 수계별 유역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량 · 수질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K-water가 만들어 가는 미래 물 관리

K-water는 스마트워터그리드 등 선진 물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물 관리 비전을 제시하고, 물 관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 관리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물 관리 체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K-water가 유네스코(UNESCO) 지정 물 관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물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K-water의 글로벌 물 관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 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국제적인 물 관리 흐름을 전 세계가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술을 수출하는 기회가 되는 세계 물 축제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를 주관하는 K-water의 미래 물 관리 모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V

좋은 사례 나누기

- 자연과의 안전한 접속!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비스
  국립공원관리공단

- 소통과 협업으로 생동하는 일터, 차세대 전사 업무포털(OASIS+)로 실현
  한국수자원공사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술과 경험을 융합해 최고의 집진장치를 만들다
  한국남부발전

-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대피 지도 시각화 서비스
  대한지적공사

- 유치원 정보공시, 학부모 실질 부담금 최초 공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번 호 좋은 사례 나누기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 우수 사례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한 응모작을 실었습니다.
* 『2013년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은 공공기관연구센터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공동 발간하였으며, 230개의 응모사례 중 공정한 심사를 거친 25개의 우수사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자연과의 안전한 접속!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비스

■ 국립공원 방문자 4천만 시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4,095만 8,773명이 국립공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월 3일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발표된 기사의 내용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최대의 휴식공간이다. 주 5일제와 웰빙 문화의 정착에 따라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제 연간 탐방객은 4천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국민 1인당 한 번씩은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셈이다.

하지만, 자연은 아름답지만 반면으로는 위험한 양면성이 존재한다. 탈진, 부상, 낙석, 조난 등 예상치 못하는 위급상황이 국립공원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설악산 폭설로 등산객 2명 조난, 1명 사망 1명 구조 (2010.3.3)"
"지리산 야간 조난자 13시간 만에 구조 (2010.9.3)"
"설악산 조난 장애인 5일 만에 극적 구조 (2012.12.27)"

국립공원과 같은 산악지역에서의 조난은 도심지역과는 달리 매우 위험하다. 도심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형지물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난사고 접수에서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소요되며,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단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조난대응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안전산행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대민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하지만 문제는 예산

ICT의 급격한 변화, 무엇보다도 2010년 스마트폰의 보급은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히 LBS[1]과 GIS, 스마트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나, 공단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DB 미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안전산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가 가장 중요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20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측량작업을 통해 정밀한 GIS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돼야 했다.

하지만, 공단 전체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정보화 예산 형편에 수 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GIS 기초자료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 없었고, 공단 내부의 공감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었다.

■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 국립공원 기초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보서비스부)"

"그게 뭔가요? 시급하지도 않고, 효용성도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구축을 해야 하지요? (관리자)"

"현재 예산증액은 힘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예산담당자)"

향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위치기반 중심이 될터, 국립공원에 대한 정밀하고도 독자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이었다.

안전산행체계 구축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10년 공단은 국립공원 GIS 기초자료 구축에 대한 타당성 및 표준방안을 제시하는 '국립공원 정밀관리도 시범구축' 이라는 시범사업을 선(先)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을 검증을 마쳤다.

이 과업의 결과물을 통해 내부적 기초데이터 구축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에는 성

1) LBS (Location-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 : 휴대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IT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위치정보기반의 시스템 및 서비스

공하였으나, 공단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위부 기금을 통한 예산조달을 모색하던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가DB구축사업' 공모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모를 준비 · 신청하여 2011~2012년, 2년에 걸쳐 12억여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단은 이 예산을 통해 20개 국립공원 16종에 대한 1:5000 축척의 정밀도를 가진 GIS자료인 '국립공원 정밀관리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국립공원 산행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비로소 공단은 국립공원에 관한 가장 정확한 GIS 기초자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치기반의 안전산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치기반의 안전산행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 산행정보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립공원의 다양한 탐방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조난 발생 시 자신의 GPS위치좌표(오차 5m 내외)를 전송하여 공단 관제실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산행정보앱'은 현재까지 약 10만명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공공기관 인기 앱이다.

산행정보앱(App)

산행정보 관제화면

■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국립공원 산행정보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대 · 내외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정보화 대상'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 획득을 필두로 2012년 9월에는 아시아 지리공간 포럼에서 '아태지역 GIS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디지털 국토 엑스포'에서 열리는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되었다.

2011년 공공정보화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2011.12.29.)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1위 ,
국토해양부장관상 수상(2012.10.10)

아시아 지리공간 포럼, 아태지역
GIS 최우수사례선정'(2012. 9.17.)

하지만, 아직 산행정보서비스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존재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의 시선은 외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산행정보서비스 구축에 6억여 원이 투입되었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조난자가 구조될 수 있겠습니까?"
(2011년 공공정보화 대상 심사위원 질문 中)
"이 시스템을 통해 단 한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투자액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발표자 답변)

위의 대화는 2011년 공공정보화 대상 사례 발표 당시 한 심사위원분께서 공단 발표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이다.

산악지형의 특성상 통신 음영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국립공원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심사위원의 우려는 당연한 의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조난자가 발생했습니다!"

산행정보서비스를 시작한지 7개월 여가 지난 2012년 7월 21일 오후 8시, 설악산사무소로 급박한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설악산 화채능선에서 손모씨 등 2명이 조난되었다는 구조요청이 속초소방서 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것이다. 조난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단 담당자는 침착하게 조난자에게 산행정보

앱 설치를 유도해 조난지점을 신고토록 하여 겨우 6시간 만에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니, 이 사건은 앱을 통해 조난자를 구조한 국내 첫 사례였다.

유사한 사례였던, 2011년 12월 설악산에서의 조난사고의 경우는 구조까지 무려 5일이나 소요되었으나, 금번의 사례는 접수에서 조난까지 겨우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산행정보서비스는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고된 신고건수는 서비스 이후 약 290여 건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산행정보서비스 이전 조난구조사례
(2011.12.20, 조난 5일 만에 구조)

산행정보 서비스를 통한 조난구조
(2012.7. 사고접수 6시간 만에 구조)

■ 국민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국민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공공기관의 업무체계의 변화와 한 걸음 앞선 관점의 서비스를 고민하게 한다. 하지만 예산부족, 여건 미성숙 등의 제약을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길은 열린다.

공단의 정보화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전체예산 대비 1%도 되지 않는 예산, 그리고 그나마 60% 이상은 유지보수 등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므로 전국 국립공원에 대한 기초 DB 구축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공단은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공모형 사업에 꾸준하게 도전하였으며, 사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국가DB구축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를 통한 국립공원 안전산행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구축한 공단 기초DB인 '정밀관리도'는 '국립공원 Open-API'와 공공DB포털을 통해 지금까지 41개 민간 · 기관 · 개인에게 자료가 제공되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중이며, 창조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립공원 정밀관리도 제공 현황〉

기관(5)	서울종합방재센터, 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육군지형정보단, 한국관광공사
민간(7)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153웨더, 레드곰, 블랙야크, 비프라미스, 지리산투어 등
개인(2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밭대학교, 충북대학교 학생 개발자, 1인 개발자 등

■ 안전하고 행복한 국립공원을 위하여!

공단은 '산행정보서비스'를 대표적이고 가장 효용적인 대민서비스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산행정보와 연계하는 고도화 사업을 정부 3.0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에 서비스 오픈 예정이다.

최근 10월 27일, 무등산에서 50대 여성 2명이 조난되었으나 정확한 위치추적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만일 이들이 '산행정보앱'을 설치하였다면 좀 더 신속하게 구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산행정보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기획중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하고 국립공원 방문과 정부 3.0의 정신인 정보의 공유 · 개방 · 활용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통과 협업으로 생동하는 일터, 차세대 전사 업무포털(OASIS⁺)로 실현

■ 정부 3.0 추진 –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박근혜정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 가겠다는 기치 아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4대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세계적인 연구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기업의 내·외부 간 소통과 협업의 비중이 2015년에는 전체 업무의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국내 유일의 수자원 전문 공기업인 K-water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 소통과 협업 중심의 차세대 전사 업무포털(OASIS⁺)을 구축하다

전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상시 제공하기 위해 K-water는 전국 70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동남아, 중동 등에 해외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수도, 단지, 에너지, 해외사업 등 타 기관에 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 이슈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 내에 산재하는 전문지식의 공유와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최신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대내·외의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정부 3.0'의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K-water는 '소통과 협업' 기반의 차세대 전사 업무포털(OASIS⁺)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OASIS+에는 구성원 간 실시간 소통도구인 'UC(Unified Communication) 메신저', Social 기반의 소통 도구인 사내 'SNS',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공유를 위해 '모바일 오피스' 등을 포함하였으며, 협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카페', Cloud 기반의 공동 문서 작성 도구인 'WiKi(공동문서편집시스템)', 집단 지식 활용을 위한 '지식人' 등이 마련되었다.

소통 기능	UC메신저, 사내 SNS, 모바일 오피스
협업 기능	카페, 문서공동편집시스템, 지식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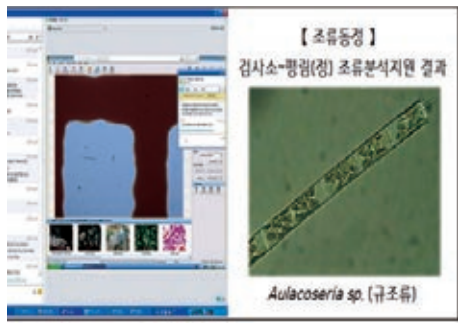
■ 만능 통합 메신저, 'UC(Unified Communication)메신저'로 실시간 소통하다

UC메신저는 국내외에 산재하여 있는 직원들에게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Instance Messaging(IM), 음성통화, 영상회의, 상호간 원격화면 공유 및 제어, Paperless 회의, 대용량 메일 전송(2G) 등을 지원한다. 직원들은 IM을 통해 음성통화 대신 직원 간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및 파일을 주고받으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재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캠과 마이크만 있다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언제라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에 산하 기관장들이 정기적으로 영상회의를 통해 업무보고 및 회의 개최로 출장비 및 경비 절감과 더불어 Time-Loss 최소화를 통해 281시간의 절감을 거두어 경제적으로도 5,1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영상회의와 Paperless회의 기능을 결합하여 발표자료를 같이 보면서 원격 영상

화상회의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회의

화면공유를 통한 실시간 조류 원격분석



회의도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조류 발생에 즉각적 대응을 위하여 현미경 분석 PC에 UC 메신저의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에서도 전문가가 출장을 가지 않고 실시간 조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및 수질검사 소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보하였다.

토목건설업의 특성상 도면 및 설계도서 등 대용량 문서 파일이 많이 생성되고 직원끼리 공유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메신저에 2G까지 대용량 메일 전송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제한 없는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140자의 마력, 소셜 기반 사내 SNS로 트윗하라!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새로운 대인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초기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시작하여 요즘은 회사 업무 홍보와 고객 의견 청취의 쌍방향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K-water는 그동안 내부적인 소통 및 업무 공유를 위하여 기업용 SNS인 Yammer를 활용하여 왔으나 접근성 및 자료 연계의 불편함과 내부 자료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자체 SNS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K-water의 SNS는 140자의 짧은 단문을 통하여 사용자 간 간편한 의사소통 및 Communication History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친밀도에 따라 서로 Following, Follower 관계를 맺어 자신이 등록한 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등록한 글을 확인하여 소식을 공유한다. Mention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낼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인 만큼 140자의 짧은 단문을 포함하여 이미지, 파일 첨부 등으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등록하면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등록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연동 기능도 갖추고 있다.

K-water의 SNS

■ BYOD기반의 모바일 오시프, K-water가 물꼬를 트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각 기업에서는 손안의 PC인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K-water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의사결정 및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내공시, 근태, 언론소식, 임원일정, 연락망, 애경사 등 주로 개인화 위주의 정보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7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BYOD(Bring your Own Device) 개념의 모바일 오피스(개인 스마트폰으로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BYOD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실시간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공동 특허출원 중이며, '2013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에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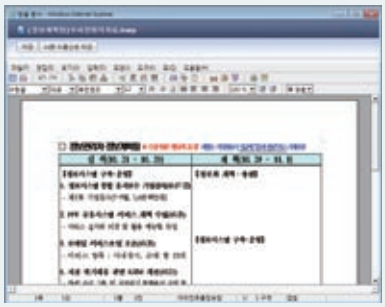
■ 일정 및 자료관리가 하나로, 난 오늘 카페에서 일한다

부서나 TFT는 업무생산성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특성에 맞는 협업공간을 필요로 한다. 협업 카페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자료 공유, 소식 전파, 사진 및 일정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 있는 협업 카페 간에는 동맹을 맺어 카페 간 일정 및 자료공유가 가능하다. 카페의 일정은 개인 일정과도 통합되어 있어, 개인 일정을 등록하면서 카페에 공유를 하면 카페에도 같이 공유가 된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별도의 일정을 취합할 필요 없이 개인 일정 카페 공유를 통해 부서 일정을 취합하여 활용한다.

협업 카페는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동 성격에 맞게 부서 카페, TFT, 6시그마/혁신, 연구동호회, 여가선용부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경영평가 대비 TFT 협업 카페는 경영평가와 관련 있는 CEO를 포함하여 280명의 지표 담당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지표별 게시판에 자료 및 일정 등을 공유하여 경영평가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	부서	TFT	6시그마/혁신	연구동호회	여가선용부
992	115	136	61	627	53

■ 구글 DOC가 부럽지 않다. 문서공동편집시스템(WiKi)



구글 DOC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편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프로젝트 문서 작성 및 업무보고 문서 등 보고서 작성이 많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구글 DOC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공동편집시스템(WiKi)'을 구축하였다. K-water의 '문서공동편집시스템(WiKi)'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2010 포맷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

직원들은 '문서공동편집시스템(WiKi)'을 이용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보고 문서나 프로젝트 문서에 대해서 파트를 나누어 서로 작성하고 취합한다.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 이력에 대해서도 공동편집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상호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공동편집시스템(WiKi)'을 이용하여 2013년 한해 4,234건의 문서공동 작업이 이루어 졌다.

■ 집단지식의 완성, 개방형 지식 서비스-지식人

K-water는 『제2회 대한민국 지식大賞』에서 '大賞'을 수상하였고, 영국 Teleos社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최고 지식경영 기업상인 『Asian MAKE賞』을 6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지식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식제공에 더해 새롭게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지식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개방형 지식은 네이버 지식iN과 같이 업무 수행 중 궁금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전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답을 구하는 형태이다. 분야별로 지식 전문가가 있어 전문가가 답변을 해 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해답이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원은 누구라도 답변을 달

아주고 질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지식人 서비스를 통해 질문자는 평균 72시간 이내에 원하는 답변을 얻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

OASIS⁺를 통한 소통과 협업에 대하여 직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오픈 후 9개월이 지난 시점(2013년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직원의 76%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업무 효율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이 43%, 2시간 이상이 16%으로 나타나 OASIS⁺가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소통과 협업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 포털(네이버, 다음) 수준의 경쟁력 확보

설문에서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및 다음과 K-water의 OASIS⁺의 수준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네이버와 동일하다는 의견이 16%, 네이버의 80% 수준이라는 의견이 39%로 나타났다. 실제로 K-water의 차세대 전사포털 기능을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 능	K-water 차세대 포털	네이버	다음
개인화 포털	○	○	○
메신저	○	○	○
SNS	○	○(미투데이)	X
모바일	○	○	○
카페	○	○	○
문서공동편집	○	○(네이버오피스)	X
지식	○	○	○
블로그	○	○	○
토론광장	○	X	○(아고라)
UCC	◑ (구축중 : 2013년 12월)	○(TV Cast)	○(TV 팟)
PPT Share	◑ (구축중 : 2013년 10월)	X	X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실제 업무 생산성 제고와 연계된 것으로 설문결과 나타났다.

■ 최신 IT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소통과 협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소통과 협업으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해 IT분야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클라우드 오피스, SNS등의 서비스가 구축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최신 IT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면밀한 분석과 IT에 대한 경영층의 과감한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 개발사와 아이디어 공유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OASIS+ 구축 시 최신 IT기술을 기업 내 소통과 협업에 접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였으며, 과업 수행 후에는 우수사례를 대외에 알리고자 '세계 10대 인트라넷 선정 (미국 닐슨노먼 컨설팅 주관)' 에 응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모바일 오피스 구축 시에는 BYOD 모델을 이용하여 국정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통과하기 위하여 '실시간 스마트폰 제어기술' 을 개발하여 공동 특허출원하기도 하였다.

■ 향후계획

K-water는 지금까지 구축된 소통과 협업 기반의 차세대 전사 업무포털의 기능을 더욱 확대 구축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전사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해 공공시설물 보안 및 대외비, 인사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물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물 재해 예방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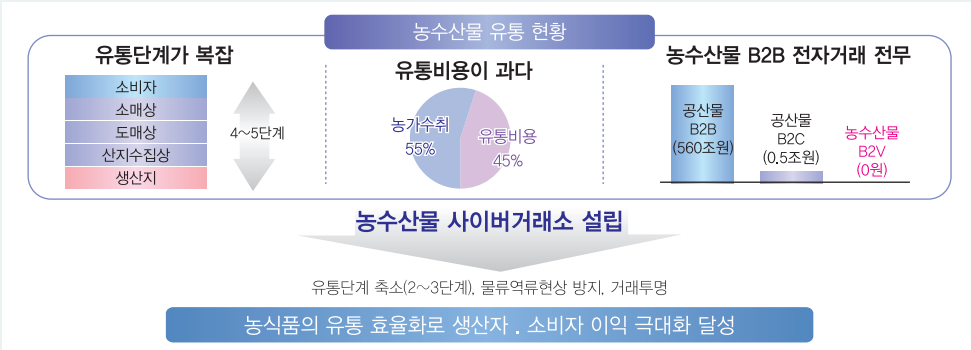
■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다한 농산물 유통비용

농산물 유통비용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40~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3 농수산물 유통정책 방향, 이천일). 결과적으로 채소류를 2,000원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약 800~900원가량이 유통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출하에서 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5~6단계의 유통경로와 산지 출하자(조직)의 시장교섭력 저하 등으로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인데, 이 경우 농가의 실질 수취금액이 감소되고 일반소비자에게 유통비용이 전가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면서 농수산물 상품가치 하락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일부 산지직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나, 탐색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기준 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수산물 전문 사이버 거래소 설립을 통해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탐색비용의 절감, 거래의 규모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 사이버거래소 설립배경



■ 사이버거래소 설립과정

* 특허 제 10-0994255 호 : 농수산물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제 10-0994257 호 : 전자카탈로그 생성 시스템 및 방법

농산물 高유통비용 구조에 '사이버직거래' 라는 새로운 유통대안 도입을 통해 유통비용 및 탐색비용 절감, 거래의 규모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립 초기 당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의 개념조차 생소하여, 활성화를 하는 데 많은 제약요소가 있었다. 사이버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해야 하며, 경매 · 입찰 시 거래처가 쉽게 바뀔 수 있고, 거래 자료가 노출되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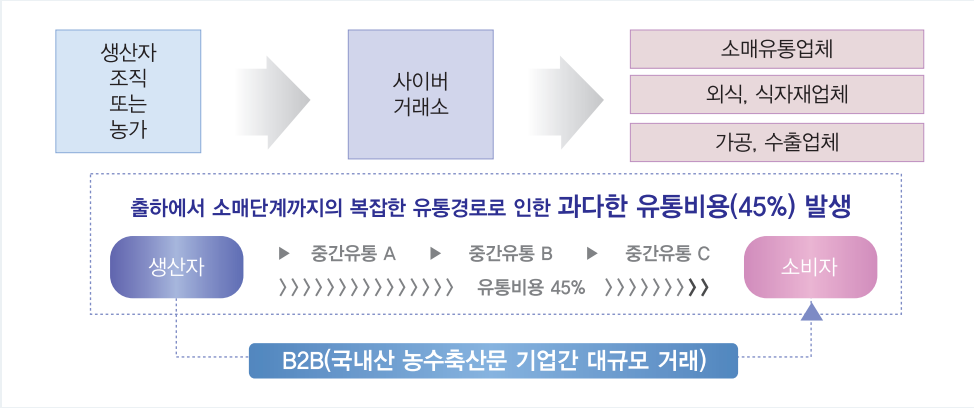
이러한 제약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거래소는 사이버공간의 장점인 상호작용성(정보의 양방향성), 공간초월, 동시적 정보전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약 2년 여에 걸친 '사이버거래시스템' 에 대한 연구 · 설계, 그리고 1년 여에 걸친 특허출원, 발명분석, 심사 등을 통하여 독창적 비즈니스모델로 공식 인정받았다.

■ 사이버거래소 시스템의 주요특징

농수산물 전자직거래가 이뤄지는 종합 e-마켓플레이스인 사이버거래소에서는 ①판매사(생산자조직)와 구매사 간 대규모 농수산물 기업 간 전자상거래, ②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③일반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 전통주 등 B2C거래, 소매유통(골목슈퍼), 외식업체(소규모 음식점) 등 소상공인 직거래가 이뤄진다. 거래분야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이버거래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징 및 거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① 사이버거래시스템은 표준 전자카탈로그를 통해 농식품 분류체계와 기본 물품정보 외에 구매사, 공급사, 품질, 물류, 인증, 가격정보 등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
② 경매, 역경매, 견적거래, 고정수발주, 정가매매 등 고객 NEEDS에 부응하는 다양한 거래방식
③ '사이버거래 정산소' 를 설치해 후불결제, 대금지급을 보증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대금 확보 지원 및 판매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금결제 처리
④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이용자의 부담 경감
  *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5%이나 사이버거래소 기업 간 거래는 0.35%에 불과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여 식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 및 식품 안전성 확보

■ 사이버거래소 거래 프로세스 예시(기업 간 거래)



■ 사이버거래 성과

사이버거래소는 이러한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0년 1,755억원 거래, 2011년 6,255억원 거래, 2012년 1조 1,146억원 거래 등 본거래 개시(2010년) 3년 만에 거래규모 '1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급성장을 이뤘으며, 이를 통해 약 486억원(2012년 실적 기준)의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농수산물거래 1조원은 2011년 통계청 자료기준 농림수산총생산액(51조원)의 2%, 전국공영도매시장(11조원)의 10%, 가락동 도매시장(4조원) 28%에 달하는 규모로 농수산물 분야는 인터넷으로 대량거래가 어렵다는 인식을 재정립하고,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도매시장 위주 구매로 높은 원가를 지불하고 있는 골목슈퍼에 가격경쟁력을, 높은 구매원가를 지불하고도 안정적 상품관리가 어려운 소형음식점에 구매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추후 권역별 배송체계를 구축하여 거점물류센터를 통한 소분포장과 검수 등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향후 2020년에는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의 10%인 5조원 거래 구현을 목표로 사이버직거래의 지속적 확대 및 새로운 거래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2018년 안정기 이후 연간 유통비용절감 2,867억원, 물류비용 절감 599억원, 환경비용절감 7억원, 소비자물가지수 0.2%p 인하 등을 목표로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유통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남부발전㈜

기술과 경험을 융합해 최고의 집진장치를 만들다

– 화력발전소 석탄 분진 제거용 원심 · 여과집진장치 개발 –

■ 경청에서 시작된 인연

2009년 3월 어느 봄날에, 하동화력발전본부에 이름도 생소한 회사 제이텍의 장두훈 사장이 방문하였다. 다른 회사에서 여러 번 퇴짜를 맞았던 경험이 있던 터라 장 사장은 이번에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연료설비팀의 직원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았다. 따뜻한 녹차를 내주었고 처음 방문한 고객의 설명을 충분이 들어주었다. 발전소를 방문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과거 몇 년 전부터 회사가 활력적으로 추진한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두훈 사장의 설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감동의 실천 이전에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동화력발전 연료설비팀도 발전소 건설 시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이던 석탄 분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골몰히 찾고 있던 터였다. 장 사장이 제시한 집진방법은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제이텍과의 인연은 2009년 8월 유망 중소기업에 신규 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제1회 남부발전 협력사 Promotion Day'를 계기로 지속되었다.

■ 목표를 공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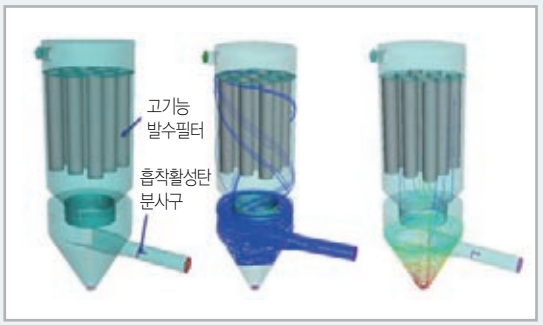
한국남부발전은 분진 없는 발전소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인 하동화력에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연료공급 설비가 타사 대비 60% 수준의 설비 용량으

로 높은 설비가동률에 따라 정비 시간은 늘 부족하였고, 분진이 자욱한 보일러 급탄 설비는 누구나 기피하는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설비로 인식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분진 포집설비는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 많은 정비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퇴적 분진에 의한 자연발화의 위험이 상존하였다. 결국 2009년 8월 14일 새벽에 제1부두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컨베이어 벨트가 불에 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은 "두 번 다시 화재는 없다"는 신념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한편, 1995년 3월 지산환경산업(주)로 시작하여 2000년 상호를 변경하며 새롭게 출발한 제이텍은 고효율 저가의 오염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후세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제이텍이 가진 문제는 아이디어를 적용해볼 실증설비가 없다는 점이었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집진장치를 개발해도 실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볼 현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남부발전과 제이텍은 혁신적 제품 개발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2010년 5월 7일 공동실증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우리는 한가족 – 협력연구개발

한국남부발전과 제이텍은 사내 협력연구개발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하동화력 석탄 취급설비 운전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 분진포집장치의 현장 실증사업에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집진설비의 문제점 분석부터 시작하였다. 협력연구는 기존 설비의 문제점 분석, 신기술 적용 제작 및 설치, 현장적용 실증시험 단계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추진 단계마다 합동 현장점검과 기술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한가족이 되어 갔다.

■ 기술과 경험의 융합으로 최고 성능의 제품을 만들다



한가족이 된 남부발전과 제이텍은 획기적인 집진장치 개발을 위해 먼저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기존 여과집진설비는 필터의 잦은 막힘과 고수분의 분진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착현상이 가장 큰 문제임을 찾아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제이텍이 보유한 핵심기술인 원심 집진기술과 수분침입 방지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집진설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여과포 집진장치와 원심력 집진장치를 일체형으로 접목시킨 고효율 CYEBAG FILTER를 개발하여 하동화력 5호기 연료공급설비에 설치하고 실증시험에 돌입하였다. 하동화력은 2010년부터 6개월 동안의 설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7차에 걸친 시운전을 통해 실증시험과 현장적용 최적화를 완료하였다. 개발 제품은 실증시험 결과 계량적인 성능평가에서 기존 집진설비에 비하여 뛰어난 집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기존 제품 대비 설치면적 60% 절감, 필터수명 5배 연장, 집진효율 4% 이상 향상이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 한국남부발전과 제이텍은 2011년 공동지식재산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년 신제품(NEP)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사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특허경영 역량을 인정받다

한국남부발전은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간 한전 본사에서 개최된 "2013 KEPCO 발명특허대전"에 개발 제품을 출품하였다. 한전, 전력그룹사, 대학생 등 총 30개 발명품이 경쟁한 발명특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 간절함으로 이룬 꿈

한국남부발전은 분진 없는 발전소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 제이텍은 최고 성능의 집진장치 개발로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또 다른 간절한 꿈이 있었다. 두 회사의 간절함이 세계 최고의 집진장치를 만들어 내었다. 남부발전은 분진포집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또한 꿈을 가진 중소기업에 과감히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의 꿈을 이루어내고 있다.

■ 새로운 목표 트리퍼 룸(Tripper Room)에서 점심을

하동화력에는 새로운 명소(名所)가 있다. 분진과 소음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곳, 방진복과 마스크를 쓰고서도 들어서기 망설여지는 곳, 바로 트리퍼 룸(Tripper Room)이다. 트리퍼란 벨트컨베이어로 이송된 석탄을 최종 목적지인 석탄저장장치(Coal Silo)에 분배하는 장치로 트리퍼가 설치된 장소가 트리퍼 룸이다. 2010년 12월 하동화력 직원은 이곳에서 점심을 함께 하였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새로운 개념의 설비관리와 개선으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장소로 변모시킨 것이다. 석탄분진이 없는 트리퍼 룸을 만들고 그곳에서 언제 어느 때나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협력과 통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대피 지도 시각화 서비스

■ 잦은 풍수해로 인한 국민 피해 증가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분석 결과, 경제적 손실이 46조원, 사망 1,309명, 이재민 28만 4,963명(1996~2005년, 기상청 자료)
- 원인별 피해액은 10년 기준 태풍 피해 10조 4천억원, 집중호우 4조 800억원, 호우 피해 1조 9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지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

▶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 ·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국민 대피지도 서비스 필요

- 대피지도가 대부분 종이로 작성되어 활용이 미흡하고, 국가 재난정보센터의 대피소 안내는 번지만 알려주어 사용자 가시성 미흡
- 재해의 위험요소가 낮은 대피소를 안내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및 사용자 위치 이외의 위험정보 제공 서비스 필요

▶ 위치정보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대피소 안내 지원을 통한 국민 안전보장

■ 신속한 위험정보 전달 필요

-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1월 기준 3,300만명 사용, 전체 국민의 67%)하고 있어,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전달이 필요

• 현재 자신이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위치의 재난정보 실시간 제공 필요

▶ 국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관, 시설물 등 관심 지역에 대한 재해 정보 서비스

■ 구축과정

1. (2012년 01월) 대피지도 스마트 폰 앱 개발 계획 협의 (LX대한지적공사 ⇔ 소방방재청)
2. (2012년 04월) '토지정보 서비스 및 대피지도 정보' 앱 개발 계획 수립
3. (2012년 11월) 지도서비스 무상지원을 위한 KT와 업무협약
4. (2013년 04월) 'LX토지알림-e'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장애요인 및 극복 과정

• (장애요인) 구축된 앱의 대국민 활용도, 실용성에 저하에 따른 "앱 폐기 우려"(많은 공공앱이 활용도가 낮음) 및 앱 운영을 위한 발생 비용 처리
• (극복방안) LX대한지적공사와 KT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올레맵 무상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국민 안전 확보, 기관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 다른 앱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부가서비스 제공 (토지정보서비스, 대피지도, 관심 지역 등록 등)

지도서비스 무상지원을 위한 KT와 업무협약

■ LX토지알림 – e 서비스 내용

〈대피지도 서비스〉

• 공사에서 작성한 침수흔적DB, 자연재해위험지구와 대피소를 사전에 (공간)분석하여

추천 대피소 안내(기상정보와 연계를 통한 실시간 기상특보 알림)

- 대피 상황 발생 시 침수피해가 없었던 곳,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지정이 되지 않은 곳 등을 사전에 (공간)분석하여 추천 대피소 및 빠른 길 안내
-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관심지역의 기상특보 상황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재난피해 사전 예방

〈부가서비스(토지정보서비스)〉

- 공사 직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현장상황 정보를 제공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인 토지정보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로 구축하여 편리성 증대

■ 사업 성공을 위한 노력

〈유사 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차별성 확보〉

- 단순 대피소만 표시해주는 스마트폰 앱은 있으나, LX토지알림-e는 차별화를 위하여 침수피해가 없었던 곳, 관심지역 설정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개발
-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침수 안전경로 안내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있음. 이 연구과제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만 시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과제로서 중복 아님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활용도 향상〉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 등 공공기관 앱 실효성 논란**
> · (2012년 04월) 국가기록원(제작비1.5억/597건), 대한주택보증 사이버 영업점(제작비1.8억/136건)
> · (2013년 09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배포 앱 45종 中 10종, 월평균 100회 이하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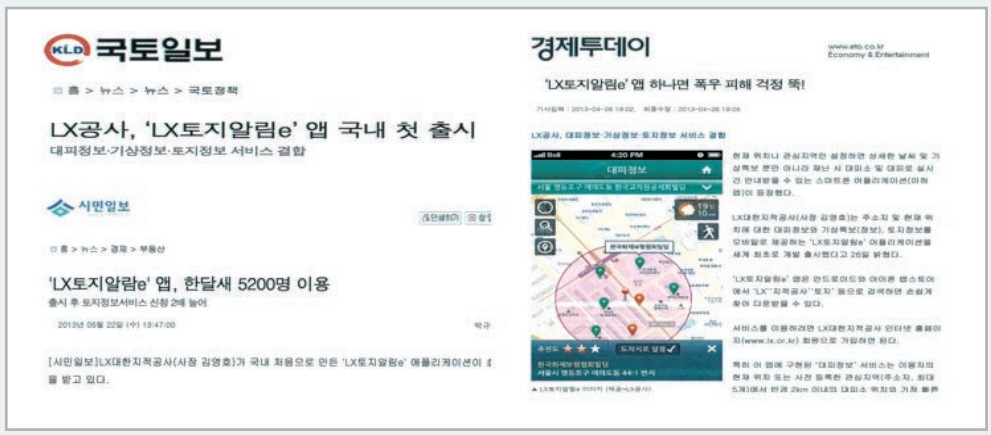
▶ 해결방안 : 대국민을 위한 LX 포털 구축으로 부가서비스 종합 제공(대피정보, 토지정보)

〈전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

- 공사 홈페이지 설명, 관련 내용 대중매체 게재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방안 마련〉

- 소방방재청-LX대한지적공사-KT와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LX토지알림-e 대국민 대피지도 서비스 기반 마련



국토일보

LX공사, 'LX토지알림e' 앱 국내 첫 출시
대피정보·기상정보·토지정보 서비스 결합

시민일보

'LX토지알림e' 앱, 한달새 5200명 이용

경제투데이

'LX토지알림e' 앱 하나면 폭우 피해 걱정 뚝!

■ 성과 · 효과

〈정량적 성과〉

- 2013년 10월 현재 앱 다운로드: 93,646건 (월평균 약 1만 5,000건 다운로드)
- 서울신문에서 주관하는 2013년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2013년 6월 29일 서울신문 20면 종합)

〈정성적 성과〉

-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LX대한지적공사' 홍보 및 새로운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피지도 서비스"로 재해 예방분야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미지 제고
- 지속적인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확대로 대국민 정보서비스 품질 고도화 기반 마련

관심지역 날씨·특보·토지정보를 실시간 안내

LX대한지적공사 'LX토지맵e'

'LX토지맵e'는 주소지 및 현재 위치에 대한 대피정보와 기상특보, 토지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대피정보 서비스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나 미리 등록한 관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의 대피소 위치와 가장 빠른 이동로를 안내한다.

날씨정보도 제공하며 입력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휴대전화로 통보해 준다.

또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통해 관심 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현장사진, 항공사진, 현장설명 등의 자세한 토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 성공요인

〈한발 앞선 시대적 필요성 파악〉

-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이상기후 발생으로 폭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현 정부의 국정과제(재난 ·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선정

〈차별화되고 꼭 필요한 서비스 개발〉

- 문자 형태의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위치기반인 지도에서 정보 제공
- 재해위험요소가 낮은 대피소 안내를 통해 국민 안전 보장
- 관심지역 설정 기능을 통하여 부모님 등 타인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기능 제공
- 토지정보서비스의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 편리성 증대

〈위험요소 사전 해결〉

- 중복투자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활용도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국민 LX 포털 구축

■ 향후계획

〈추가 기능 개발〉

- 사용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등록함으로써 전 국민이 재해 상황 공유 · 확인
- 향후 실시간 기상정보와 침수흔적정보의 분석을 통한 실시간 안전경로 서비스 실시

〈안정된 서비스 체계 구축〉

- 침수흔적정보 작성 확대로 앱 서비스에 활용할 DB를 정밀하게 구축하여 고품질 서비스 강화
- 대피소 정보 업데이트, 대피소 도보경로 안내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완벽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된 서비스 실시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 정보공시, 학부모 실질 부담금 최초 공개

■ 도입배경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유치원 교육정보에 대해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다양한 특성 및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에게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제이다.

■ 제도소개

이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8년 12월부터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교육에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시서비스를 하고 있다. 교육기관 중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도 정보공시를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여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추진과정

이에 따라 우리 원은 법률이 지정한 기한(2012년 9월)내에 유치원 정보공시제 실시를 위해 신속하고 간명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시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치원 현장의 정보화 역량을 감안한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입력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유치원 및 시·도교육청과 유치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법안통과 후 9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국·공·사립 유치원 총 8,559개원(국립 3개원, 공립 4,516개원, 사립 4,040개원)이 유치원 정

보공시 입력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유치원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전용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를 개통함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치원알리미에서 검색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는 7개 항목 18개 범위(유치원 규칙 등 수시 2종, 원비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현황 등 정시 16종)에서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에 대해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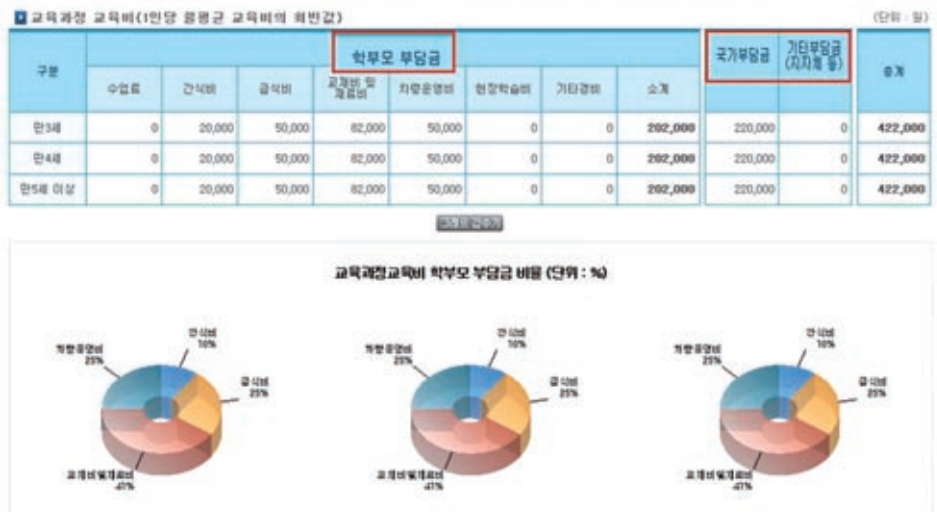
그러나 원비현황에 대해 2012년 9월과 2013년 2월 등 2회에 걸쳐 공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공시를 하고 있어 학부모가 국가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원비는 얼마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 원비현황에서는 학부모 부담과 정부 부담금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유치원 원비 총액 중 학부모 실제 부담금과 정부 등에서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부담금(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국가 부담금 외 부담금)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유치원 원비 수준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알리미 메인화면

유치원알리미 원비현황 중 교육과정 교육비 부분 공시화면



교육과정 교육비(1인당 월평균 교육비의 최빈값) (단위 : 원)

구분	학부모 부담금								국가부담금	기타부담금 (지자체 등)	총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	소계			
만3세	0	20,000	50,000	82,000	50,000	0	0	202,000	220,000	0	422,000
만4세	0	20,000	50,000	82,000	50,000	0	0	202,000	220,000	0	422,000
만5세 이상	0	20,000	50,000	82,000	50,000	0	0	202,000	220,000	0	422,000

교육과정교육비 학부모 부담금 비율 (단위 :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현황의 경우는 학부모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비 부담에 따른 운영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특성화활동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프로그램 단가',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 등 세부내역을 확대 공개하였다.

유치원알리미 원비현황 중 특성화활동 운영현황 부분 공시화면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현황(방과후과정 내 특성화활동 참여, 방과후과정 부담금 지원 원아)

구분	프로그램운영수	활동영역	프로그램명	월월운영시간 (단위 : 분)	주월운영횟수 (단위 : 회)	프로그램별단가 (단위 : 원)	참여원아수 (단위 : 명)	원아 1인당 특성화활동비 (월회반군, 단위 : 원)
만3세	5	언어	생각대통령	50	1	24,000	5	73,500
		체육	유아체육	50	1	14,000	6	
		과학창의	리틀사이언스	50	1	19,000	7	
		문화예술	오디	50	1	16,500	6	
		문화예술	창의아트	50	1	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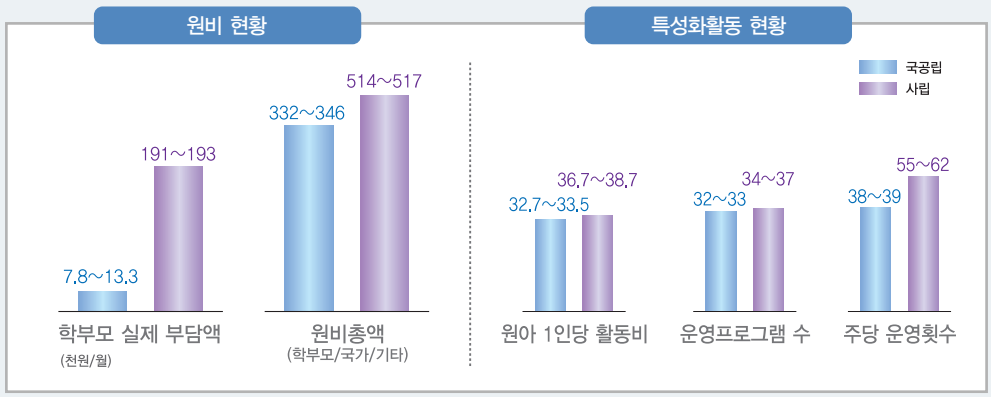
■ 성과 · 효과

이와 같이 개선된 유치원알리미를 통하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국 · 공립은 대략 월 7.8천원에서 13.3천원이 소요되고,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에는 월

191천원에서 193천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대해 유치원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을 통해 공립에서는 일주일에 3.8회에서 3.9회 정도를 운영하고, 사립에서는 5.5회에서 6.2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8월 공시결과 주요 원비 및 특성화활동 현황〉

원비 현황	학부모 실제 부담액	국 · 공립(7.8~13.3천원)/ 사립(191~193천원)
	원비총액(학부모/국가/기타)	국 · 공립(332~346천원)/ 사립(514~517천원)
특성화 활동 현황	원아 1인당 활동비	국 · 공립(32.7~33.5천원)/ 사립(36.7~38.7천원)
	운영 프로그램 수	국 · 공립(3.2~3.3개)/ 사립(3.4~3.7개)
	주당 운영횟수	국 · 공립(3.8~3.9회)/ 사립(5.5~6.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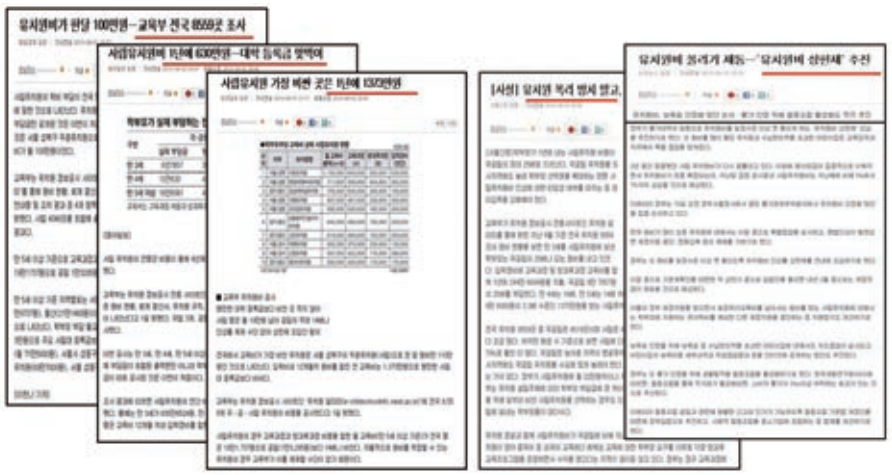


■ 성공요인

2012년 9월 이후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치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부모 실제 부담금 분리와 특성화활동비 세분화를 통해 유치원 원비,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평가결과 등 총 18개 영역의 유치원 관련 다양한 정보의 투명한 공시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 선택을 위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의 모든 유치원 원비에 대해 2012년 9월, 2013년 2월, 8월 총 3번에 걸쳐 공개하고, 이에 대해 20여회 이상의 유치원 원비 관련 안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한 주요 방송 ·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이 결과 과도한 유치원비에 대한 사회적인 조정 의견들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치원 원비관련 보도기사



■ 향후 계획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통해 유치원 교육 정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공시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시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시자료의 오류에 대해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여 신고 및 오류 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유치원 정보공시 오류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시자료의 검증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치원 원비현황 공시결과를 통하여 학부모 부담금 및 특성화활동비가 과도하게 고액인 유치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 점검 실시하고,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방과후과정에 대한 적정한 특성화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치원 원비 운영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젊은 유치원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정보공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2013년 말)이다.

VI 정책동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정책동향**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정책변화 혹은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진행 일정

2013년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2013년 12월 27일	제1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2013년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
2014년 01월 23일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2014년 01월 29일	38개 중점관리기관[1]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제출완료
2014년 02월 27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2014년 03월 18일	제4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2014년 03월 31일	256개[2] 중점 外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완료
2014년 04월 25일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확정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주:1) 8개의 중점관리기관은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부채감축기관 18개),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보,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보, aT, 코스콤, 수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 해당

2)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준) 중에서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진행 일정

-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 말 493조원으로 2007년 말 대비 244조원 증가함

〈공공기관 부채규모〉

(단위: 조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규모	249.2	290.0	336.8	397.0	459.0	493.3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2년을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은 합계 4.3조원으로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 7.3조원도 충당이 안 되는 수준임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3.12.11)

-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의 부채 증가원인을 성질별 · 원인별로 분석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을 알리오를 통해 상세히 공개
- (부채감축)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경영평가를 통하여 이행되도록 부채감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00%(현행 220%) 수준에서 관리
- (방만경영)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이행실적 평가에 의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방만경영을 조기해소
- 신속한 정상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진이 임원보수 대폭 하향조정
- 기관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무부처가 소속기관의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제출된 계획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검토 및 보완(2014.2.2)

-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운위에서 확정
- 방만 경영 개선계획은 8대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
- 공공기관은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 정부는 금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임금동결 등과 같은 조치 마련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공공기관의 부채 관련 자구노력(2014.2.27)

〈자구노력 유형별 부채감축규모〉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기타	계
21조 7,037억원 (51.7%)	8조 7,352억원 (20.8%)	5조 8,700억원 (14.0%)	5조 7,081억원 (13.6%)	42조 170억원 (100%)

자료: 기획재정부

- 비핵심 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과 같은 사업 조정을 통해 사업비 축소
-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지분 매각, 회원권, 연수원 등 복지시설 매각 등의 자산매각 추진

〈국내자산 유형별 매각대상〉

부동산		출자지분		직원복지시설	
6.0조원[1]		3.1조원[1]		111억원[1]	
한전, LH, 도로, 가스, 광물, 석유	수도권 본사부지 매각	도공	민자도로 지분	한전, 가스, 중부	콘도회원권
				도공	골프회원권
철도	용산, 성북역 부지	한전	한전 KPS, 한전기술, LG U+	가스	연수원
한전	열병합부지			LH, 수공, 한수원, 발전사	사택

주:1) 매각금액에 중장기계획상 자산매각계획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 모든 기관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함으로써 경영효율화 달성
- 각 기관이 제출한 공공요금(전기 2조원, 도로 8천억원, 철도 7천억원, 수도 3천억원) 인상계획은 불인정

■ 제출된 부채감축 계획이 조건부 승인된 기관(2014.2.27)

〈기관별 재무건전성 추이〉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2012년	2017년	2012년	2017년	2012년	2017년
LH	0.7	0.7	466	377	12,047	4,579
수자원공사	0.8	0.6	123	134	3,083	2,309
철도공사	▲ 0.4	0.2	244	227	▲ 28,202	▲ 3,897
철도시설관리공단	0.4	0.8	–[1]	–[1]	▲ 932	▲ 1,252
석탄공사	▲ 1.0	▲ 0.5	자본잠식		▲ 931	▲ 833

주:1) 자본금, 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기관	추가적 보완책	조건부 승인 사유
LH	민간보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 구조조정과 사업 부문별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 요구	재무구조의 건전성[1] 확보 미흡 – 이자보상배율 이하 – 과다한 부채비율
수자원공사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 요구	
철도공사 철도시설 관리공단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경쟁 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	
석탄공사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 (기관 통폐합까지 고려)	자본잠식 상태 영업수지 적자 지속

주:1) 민간의 재무건전성 지표: ①이자보상배율〉1배 ②부채비율〈200% ③당기순이익 흑자

- 추가적 보완대책은 3월 말까지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부채감축계획과 관련된 위험 관리방안

- 정상화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적절한 대책 강구
- 기관별 자산의 헐값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을 그룹핑하여 매각하는 방안과 매각시기 조정 등 병행하여 자산매각 관리
-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반 확충

■ 승인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내용(2014.2.27)

〈개선대상 항목 수〉

개선대상 항목 수	7대[1]	6대[2]	5대[3]	4대 이하[4]
개선 필요한 기관 수	9개	10개	12개	7개

주: 1) 7대 항목: 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렌저,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한전기술, 인천공항,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
2) 6대 항목: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3) 5대 항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주택보증, 코스콤, 무역보험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장학재단, 한국전력, 한수원, 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4) 4대 이하: 도로공사(4), 서부발전(4), 동서발전(4), 중부발전(4), 조폐공사(3), 석탄공사(3), 철도시설공단(2)
자료: 기획재정부

- 8대 항목*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 반영 여부, 개선수준의 적정성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어 현 계획대로 추진

  * 8대 항목: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 복리후생비의 경우, 학자금 및 보육료 개선, 가족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 · 고가 기념품 지급 개선 등을 정비
- 중점관리 38개 기관은 2014년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2013년 대비 약 ▲1,544억원(▲31.3%) 감축할 예정이며,
- 1인당 복리후생비의 개선 수준은 2013년 대비 평균 ▲137만원(▲32.1%) 감축되어 38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함(2013년 24개 기관 500만원 초과)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목표〉

(복리비: 억원, 1인당: 만원)

구분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복리비 증감	비중(%)	1인당 증감	비중(%)
	복리비	1인당	복리비	1인당				
전체	4,940	427	3,397	290	▲1,544	▲31.3	▲137	▲32.1
방만경영기관 (20개)	1,455	657	959	414	▲495	▲34.0	▲242	▲36.9
부채관리기관 (18개)	3,485	372	2,437	259	▲1,048	▲30.1	▲113	▲30.4

- 방만경영기관(20개)은 ▲242만원(▲36.9%)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1,306 → 447만원), 수출입은행(969 → 393만원), 코스콤(937 → 459만원), 마사회(919 → 547만원)는 40% 이상 대폭 감축함
-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 직원 가족 특별채용 금지, 휴가 및 휴직제도 정비, 법령에 따른 경영 · 인사권 확립 등을 통해 기타 제도개선

참고 1 방만경영 주요 개선사례

항목	주요 사례	개선 내용
학자금	(무보) 기금에서 대학 입학축하금 200만원 지급	• 폐지
	(농수산유통) 예산에서 예능계 중학교, 특목고 · 사립고 학비 전액 지원	• 중학교 폐지, 고등학교 공무원 수준 축소
	(도공) 예산에서 초등 5~6학년 자녀 영어캠프비 70% 지원	• 폐지
	(마사회) 예산에서 초중생 1인당 스키캠프 30만원, 기금에서 초중고생 1인당 영어캠프 63만원 지원	• 폐지
	(한수원)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2명까지 무상지원	• 장학금제도로 변경
	(인천공항)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300만원까지 무상지원	• 폐지
경조사비/기념품	(마사회) 예산에서 근무연수 5년부터 5년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5~15돈 지급	• 10,20,30년차만 지급하되, 70~150만원 상당 물품 지급
	(거래소) 예산에서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상품권 각 70만원, 기금에서 본인 사망 시 경조비 2,000만원 지급	• 기념품 폐지, 경조금 1,000만원으로 축소
	(그랜드코리아) 본인생일, 명절 등 각종 기념일에 1인당 105만원 상품권 및 7년 근속자에게 외식상품권 20만원 지급	• 생일, 근속포상 폐지, 기타 기념일은 지급액을 축소하여 온누리상품권 또는 저가 기념품 지급
	(코스콤) 예산에서 결혼기념일 5년마다 10만원, 3자녀 출산장려금 2,000만원, 본인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 기금으로 변경 및 결혼기념일 폐지, 출산장려금 · 사망조의금 각각 100 · 1,000만원으로 축소
의료비	(한전기술) 기금에서 본인 의료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지원	• 폐지
	(거래소) 직원 업무외 질병, 가족의료비를 1,500만원(5대 질병 2,500만원) 한도 지원	•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 포인트 활용
특별채용	(가스기술, 부산대병원) 업무상 재해로 사망, 퇴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 폐지
	(예결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 정년퇴직 · 일반사망 등 이유 불문하고 유가족 특별채용	• 폐지
	(강원랜드) 정년퇴직 시 직계가족 우선채용	• 폐지

- 36개 기관은 3분기 이내에,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2개 부채관리기관)은 4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

■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256개)의 정상화계획 (2014.03.31)

-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의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인 반면 나머지 10개의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함

  * 1인당 복리후생비 450만원 이상인 기관: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 위반사항 20건 이상인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기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 이들 10개 기관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3년 대비 20.6%(4,636→3,679천원, ▲957천원)으로 감축
- 주로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사례로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지원(특목고 포함)등의 항목이 많았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 제출 (2014.03.31)

-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 등과 같은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 5개 기관은 사업조정(1.2조), 자산매각(0.5조) 등을 통해 부채**를 ▲2.0조원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

  * 인천공항,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 지역난방

  ** 5개 기관의 부채규모: (2012) 9.0조원 → (2017) 13.3조원

- 나머지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4개), 융자 및 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위탁사업을 하는 기관(4개):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공무원연금, 자산관리공사
  * 융자 및 보험사업을 하는 기관(6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
  * 금융부채 없는 기관(8개): 거래소, 건강보험, 국민체육공단, 마사회, 사학연금, 예탁결제원, 한국공항, KOTRA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중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은 보완계획을 제출함
- 반면 석탄공사는 산업부와 석탄공사 및 민간전문가로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 논의를 거쳐 제출시기를 4월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4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행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입장인 반면 회의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타협하기 어렵다는 입장**

- 정상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의 정도와 임직원의 협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통해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
- 방만 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하여 중간평가시기를 앞당겨 중점관리대상 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 계획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으며 노조 간 연대나 경영성과 평가 거부의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처사라고 경고
- 정부는 공공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연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거나 파업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 현 부총리는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하여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에 타결(2014년 03월 27일)했다고 언급함

■ **공공부문 노조와 관련 분야 전문가, 민주당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반발하는 입장**

-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 공공부문 노조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의 본질적인 원인은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에 있다고 주장
- 설훈 의원(민주당)과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의 급증한 부채 원인은 국책사업 실패가 크다고 주장
-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쇄신이 없는 한 올해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예정
- 304개 공공기관 노조는 '동시 임금단체협상'(3월 22일) 나서기로 하고 이를 거쳐 총파업(5~6월)으로 연계하겠다는 움직임
-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로 지목된 과잉 인력 감축과 민영화 등과 같은 방안이 빠져 있다고 평가함

■ **새누리당 측은 공기업 정상대책을 통하여 공기업 부채발생의 원인과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나
-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을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과 방만 경영에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식이 확정되었음 (2014.04.25)

		부채 관리 대상기관		방만 경영 대상기관	
		중점관리 기관(38개) 中 18개 기관	중점 外 점검기관(16개) 中 8개 기관	중점관리 기관(38개) 中 20개 기관	중점 外 점검기관(16개) 中 8개 기관
평가 항목		부채감축 실적(40%) 방만 경영 개선 실적(60%)		방만 경영 개선 실적	
평가 방법	비계량 평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경영효율 등을 통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35점) 예) 자산 매각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 위탁,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준수 여부 평가		기관별 방만 경영 개선 이행노력, 노사협력 체계 구축 노력 등을 평가(35점) 예) 노사 간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노사 간 협의회(직원설명회) 개최 실적 등	
	계량 평가	부채감축평가		방만경영평가	
		1) 2014년 1~8월까지의 부채감축 계획 대비 부채 감축실적(32.5점) 2) 계획수립의 적극성(32.5점)		중점관리(부채 18개, 방만 20개) 대상기관을 2013년 말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 금액 및 방만 개선대상 건수 기준 각각 3개 그룹 (참고1,2)으로 분리 및 평가 〈평가지표〉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실적(16.25점) -개선대상 건수 개선 실적(16.25점) -계획수립의 적극성(12.5점) -계획이행의 적극성(20점)	

- 계획 수립의 적극성에 대한 판단은 정상화 계획상의 2017년까지 부채감축 대비 2014년 부채감축 계획 비율을 기준으로 함

참고 2 방만경영 후생비 평가 그룹별 대상기관 (출처 : 정상화 이행계획)

기관명			1인당 복리후생비(만원)		증감	
			2013년 결산(A)	2014년 계획(B)	B-A	%
방만경영기관	1그룹	① 한국거래소	1,306	447	▲859	▲65.8
		② 수출입은행	969	393	▲576	▲59.4
		③ 코스콤	937	459	▲478	▲51.0
		④ 한국마사회	919	547	▲373	▲40.5
		⑤ 한전기술	785	384	▲401	▲51.1
	2그룹	⑥ 인천공항공사	681	423	▲258	▲37.9
		⑦ 가스기술공사	677	595	▲82	▲12.1
		⑧ 그랜드코리아레저	663	470	▲193	▲29.1
		⑨ 강원랜드	610	439	▲171	▲28.1
		⑩ 지역난방공사	607	406	▲200	▲33.0
		⑪ 무역보험공사	591	401	▲190	▲32.1

	3그룹	⑫ 원자력안전기술원	562	300	▲263	▲46.7
		⑬ 대한주택보증	555	397	▲157	▲28.4
		⑭ 한국투자공사	553	288	▲265	▲47.9
		⑮ 방송광고진흥공사	537	314	▲223	▲41.5
		부산항만공사	536	331	▲205	▲38.2
		예탁결제원	528	426	▲102	▲19.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12	358	▲154	▲30.1
		한국조폐공사	484	330	▲154	▲31.8
		부산대병원	455	345	▲110	▲24.1
		(평 균)	**657**	**414**	**▲243**	**▲36.9**
부채과다기관	1그룹	① 석유공사	694	476	▲218	▲31.5
		② LH공사	641	434	▲207	▲32.3
		③ 예금보험공사	538	439	▲99	▲18.4
		④ 남동발전	530	382	▲148	▲28.0
		⑤ 남부발전	523	354	▲170	▲32.4
		⑥ 한수원	517	337	▲179	▲34.7
	2그룹	⑦ 중부발전	487	245	▲242	▲49.7
		⑧ 수자원공사	449	365	▲84	▲18.7
		⑨ 가스공사	449	352	▲98	▲21.7
		⑩ 한국전력공사	440	217	▲223	▲50.6
		⑪ 서부발전	439	338	▲102	▲22.9
		⑫ 도로공사	396	374	▲22	▲5.6
		⑬ 동서발전	370	170	▲200	▲54.1
	3그룹	⑭ 광물자원공사	244	231	▲13	▲5.4
		⑮ 장학재단	235	223	▲12	▲5.0
		철도공사	160	158	▲2	▲1.1
		철도시설공단	159	154	▲5	▲2.8
		석탄공사	64	66	2	4.3
		(평 균)	**372**	**259**	**▲113**	**▲30.4**
38개 기관 평균			**427**	**290**	**▲137**	**▲32.1**

주:1) 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비가 높은 것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낮게 인상하고, 선택적 복지비를 많이 인상한 것에 기인하며, 2012년 기준 복리후생비 제외 1인당 인건비는 58백만원 수준으로 20개 방만경영 기관 중 16위로서 평균 근속연수(2014년) 감안 시 높지 않은 수준
2) 석탄공사는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피복비 등 절감에도 불구하고, 진폐증 예방을 위한 현장직원의 건강검진비 단가 인상(15→30만원)에 따라 증가

참고 3 방만경영 개선실적 평가 그룹별 대상기관 (출처 : 정상화 이행계획)

	유형		기관명	개선 대상 건수
	방만경영기관	1그룹	① 수출입은행	28
			② 원자력안전기술원	27
			③ 한국마사회	25
			④ 코스콤	24
			⑤ 한국거래소	23
			⑥ 한전기술	22

	유형		기관명	개선 대상 건수
중점관리대상기관	방만경영기관	2그룹	⑧ 인천공항공사	20
			⑨ 지역난방공사	19
			⑩ 대한주택보증	19
			⑪ 그랜드코리아레저	19
			⑫ 한국투자공사	18
			⑬ 가스기술공사	18
			⑭ 강원랜드	17
			⑮ 무역보험공사	17
		3그룹	⑯ 부산대병원	15
			⑰ 부산항만공사	14
			⑱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⑲ 방송광고진흥공사	11
			⑳ 한국조폐공사	7
			(평 균)	**19**
	부채과다기관	1그룹	① LH공사	20
			② 예금보험공사	20
			③ 가스공사	17
			④ 남부발전	16
			⑤ 수자원공사	16
		2그룹	⑥ 남동발전	15
			⑦ 한수원	15
			⑧ 중부발전	15
			⑨ 한국전력공사	15
			⑩ 서부발전	15
			⑪ 동서발전	14
			⑫ 철도공사	13
			⑬ 석유공사	12
			⑭ 도로공사	11
		3그룹	⑮ 장학재단	9
			⑯ 광물자원공사	8
			⑰ 석탄공사	5
			⑱ 철도시설공단	4
			(평 균)	**13**

■ 중점 외 기관(256개)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이 확정 및 추진하기로 결정 (2014.04.25)

- (방만경영) 256개 중점 外 기관의 제출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이 이행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20만원(▲9.6%, 205만원→185만원) 감축될 전망

- 방만경영의 규모에 따라 중점 外 기관을 점검기관과 자율관리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계획
  - 복리후생비≧450만원*이거나, 방만경영 개선필요항목≧20항목인 기관**은 점검기관(8개), 그 외 248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

    * 정금공, 감정원, 캠코, JDC
    ** 정금공,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원, 원자력연료, 기보

  - 중점기관(8개)은 중점관리기관에 준하는 이행상황을 관리해야 하며 금년도 3분기 말 실시하는 중간평가를 통해 부진한 이행실적을 받을 경우 임금동결 조치를 취할 예정
  - 자율관리기관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하여 이행보고서를 기재부로부터 확인을 받으며, 이행 확인 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나 연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계획
- 193개의 기관은 3분기 이내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할 예정인 반면, 관광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63개의 기관은 4분기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
- (부채감축) 23개 부채관리 중점 外 기관은 ▲5.3조원 규모의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4조원의 부채감축을 통해 부채증가 30% 감축 정부지침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상태
  -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2014년 3분기 말 중간평가 시,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 부산 · 인천 ·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나머지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주무부처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

■ 4개 중점관리기관의 추가적인 부채감축계획 보완대책 제출 완료됨(2014.04.25)

	요구된 추가적 보완책 (2014년 2월 27일)	제출 완료된 추가적 부채감축계획대책 (2014년 4월 25일)
LH	민간보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 구조조정과 사업 부문별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 요구	사업성 재분석에 의한 사업조정 ▲2.3조원 등 총 3.3조원 제시 (감축규모가 가장 큼) – 공사채 축소 발행 – 인력운영효율화 시행 예정
수자원공사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 요구	해외사업조정 등을 통해 ▲0.2조원 감축 – 수자원 · 수도 등 고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고유사업비중: 51%(2012년) → 59%(2017년) → 78%(2022년))
철도공사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경쟁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	자산 매각과 수입확대 등으로 ▲0.8조원 감축 – 고인건비 구조 해소를 위하여 지역 본부 · 사업소통 폐합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효율화 추진계획
철도시설공단		자산 매각과 수입확대 등으로 ▲0.4조원 감축

자료: 기획재정부

〈기관별 재무건전성 지표추이〉

기관명	이자보상배율(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억원)		
	2012년	2017년 (수정 전)	**2017년 (수정 후)**	2012년	2017년 (수정 전)	**2017년 (수정 후)**	2012년	2017년 (수정 전)	**2017년 (수정 후)**
LH	0.7	0.7	**0.9**	466	377	**367**	12,047	4,579	**5,879**
수자원공사	0.8	0.6	**1.0**	123	134	**133**	3,083	2,309	**2,346**
철도공사	▲0.4	0.2	**0.4**	244	227	**198**	▲28,202	▲3,897	**▲2,926**
철도시설 관리공단	0.4	0.8	**1.0**	–[1]	–[1]	–[1]	▲932	▲1,252	**▲237**

주:1) 자본금, 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곤란
자료: 기획재정

■ 259개 전 기관이 확정된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다면 건전 경영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

-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23.7%(▲71만원) 감축되고, 중점관리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32.1%(▲137만원), 중점 外 256개 기관은 평균 ▲9.6%(▲20만원) 감축될 것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41개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이 이행된다면 해당 기관들의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전망되었던 부채증가는 48조원으로 감축될 것임

- 2016년부터 부채규모는 하락추세로 전환되고 2017년 말 부채비율은 200% 이내 (187%)의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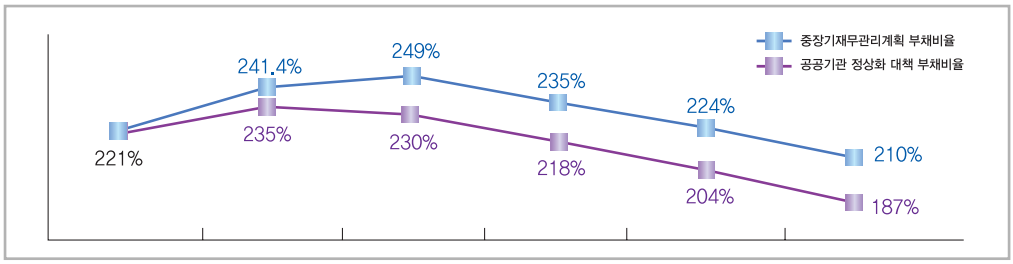
참고 4 전체 공공기관(41개) 재무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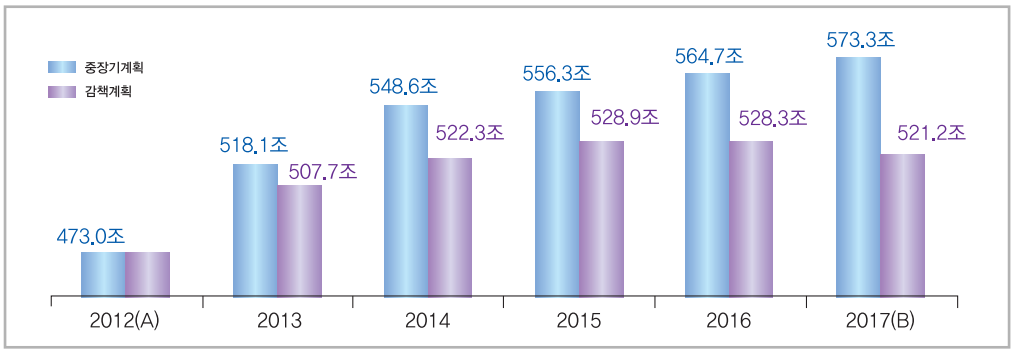
■ 정상화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7년 부채비율은 200% 이내 관리 가능 전망

〈공공기관(41개) 재무전망〉

	2012(A)	2013	2014	2015	2016	**2017(B)**	증감(B-A)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3년 9월, C)							
부채(조원)	473.0	518.1	548.6	556.3	564.7	**573.3**	100.3
자산(조원)	686.9	732.7	769.0	793.0	817.0	**845.9**	159.0
부채비율(%)	221.1	241.4	248.9	235.0	223.8	**210.3**	▲11.0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4년 3월, D)							
부채(조원)	473.0	507.7	522.3	528.9	528.3	**521.2**	48.2
자산(조원)	686.9	724.0	749.6	771.1	787.8	**799.3**	112.6
부채비율(%)	221.1	234.7	229.8	218.4	203.6	**187.3**	▲33.8
증감(D-C)							
부채(조원)	-	▲10.4	▲26.3	▲27.4	▲36.4	**▲52.1**	
자산(조원)	-	▲8.7	▲19.4	▲21.9	▲29.2	**▲46.6**	
부채비율(%p)	-	▲6.7	▲19.1	▲16.6	▲20.2	**▲23.0**	





■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음

-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각각 부채 감축기관과 방만 경영 기관별로 5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내부평가급을 30% 추가 지급받는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

  * 부채 · 방만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 기관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

- 단체협약 미타결 등 방만 경영에 대하여 개선 노력이 부진한 기관은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것임

■ 8월경에 중간평가단을 구성한 후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임

● 참고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년 12월 11일)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년 12월 12일)
– (보도참고)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년 1월 23일)
–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년 2월 2일)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제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년 2월 27일)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 부채감축 계획
–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 기획재정부 뉴스(2014년 3월 27일)
– 현 부총리, “푸드 트럭 허용 등 41개 규제개혁 즉시 착수”
■ 기획재정부 뉴스(2014년 4월 1일)
– 중점 외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 기획재정부 뉴스(2014년 4월 1일)
–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 복리후생비 20% 감축
■ 기획재정부 뉴스(2014년 4월 25일)
– 중간평가 대상과 방식 확정
■ 기획재정부 뉴스(2014년 4월 25일)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 YTN NEWS FM 94.5(2014년 2월 11일)
– 공공기관 개혁 여야 입장은?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 한국경제 (2014년 2월 28일)
– LH · 수자원公 등 5곳 정상화 계획 ‘퇴짜’ … 3년 내 빚 42조 줄인다
■ 한국경제 (2014년 3월 6일) – 公기관 노조 304곳 ‘동시 임단협’ 논란
■ 마이더스 (2014년 3월호) – 공기업 혁신 ‘발등의 불’ … 수술대 올랐다

* 본 동향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2014년 4월 30일 304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정보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시됨

■ 2013년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음

• (임직원 정원) 전력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부문과 의료 및 복지 등과 같은 국민생활서비스 부문의 인력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임직원의 수는 3.2%(8,321명) 증가함

〈304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변화추이〉

(단위: 만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임직원 수	23.8	24.8	25.5	26.4	27.2

자료: 기획재정부

〈부문별 인력증원 규모〉

(단위: 천명)

분야	의료[1]	에너지 · SOC[2]	금융	출연연 기타
부문별 인력 증원 규모	4.1	2.4	1.2	0.7

주:1)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병원 개원에 따른 필수인력 보강 등으로 603명 증가
2)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수요관리 등을 위해 384명 증원

자료: 기획재정부

• (신규채용) 전년 대비 4.4%(719명 증가) 증가한 17,227명 수준으로 선진화 계획 시행 이전인 2004~2007년 연평균 증가율(4.7%)과 유사한 수준

〈부문별 인력증원 규모〉

(단위: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	증가율	
							전년 대비	연평균
채용규모	9,239	11,264	14,582	16,508	17,227	719	4.4	16.9

자료: 기획재정부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한수원,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관 채용규모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11.9% 증가함

〈분야별 채용규모 변화 추이〉

(단위: 명)

분야	SOC	복지 · 노동	산업 · 에너지
채용규모	▼23.2% (2,352→1,806)	▲10.6% (5,546→6,136)	▲15.1% (4,010→4,615)

자료: 기획재정부

– 고졸채용의 경우, 2012년 큰 폭의 증가 이후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함

〈5년간 열린채용 규모 〉

(단위: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B-A)	증감률
여성	4,261	5,086	6,330	6,920	7,330	410	5.9
장애인	95	169	400	272	294	22	8.1
이공계	2,304	3,499	4,892	5,933	6,030	97	1.6
비수도권	5,027	5,467	6,971	7,707	8,623	916	11.9
고졸자	304	468	666	2,048	2,111	63	3.1

자료: 기획재정부

•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

〈5년간 비정규직 채용규모〉

(단위: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B-A)	증감률
비정규직	38,175	38,501	41,945	45,353	44,484	▲869	▲1.9

자료: 기획재정부

• (보수) 기관장 평균연봉과 직원 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됨
  – (기관장 평균연봉) 2012년 대비 0.8%(128만원) 증가한 1억 6,300만원으로 2012년 공시 2.8%보다 증가율이 둔화됨
  –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2012년 대비 1.7%(113만원) 증가한 6,700만원으로 2012년 공시 2.6%보다 증가율이 둔화됨
• (복리후생) 복리후생비의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3.0%(▲511억원) 감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규모도 15.3%(▲335억원) 감소함
  – 2013년 복리후생비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가스공사와 LH* 등과 같은 주요 공기업이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전체 현원이 증가(2.3%)함으로써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감소함

  * 가스공사(▲212.9억원), LH(▲182.2억원), 한전(▲84.3억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이 감소한 이유는 철도공사 등의 2012년도 세전순이익 감소와 정부의 기금출연 제한 정책* 등 때문임

*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 초과 기관은 출연 불가 등(예산편성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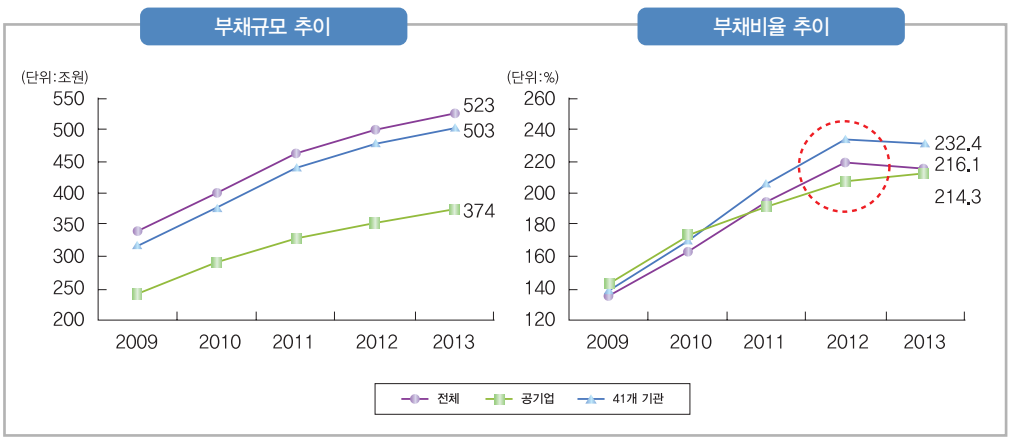
• (재무정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됨

〈부문별 인력증원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09	2010	전년비 증감	2011	전년비 증감	2012	전년비 증감	2013	전년비 증감
합 계	338.5 (135.4)	398.9 (163.8)	60.5 (28.4)	460.8 (194.7)	61.9 (30.9)	498.0 (219.6)	37.2 (24.9)	523.2 (216.1)	25.2 (▲3.5)
· 공기업	238.7 (144.0)	292.0 (173.9)	53.3 (29.9)	328.7 (192.4)	36.7 (18.5)	353.2 (207.3)	24.5 (14.9)	374.2 (214.3)	21.0 (7.0)
· 준정부기관	90.4 (128.1)	98.0 (156.3)	7.6 (28.2)	122.3 (237.5)	24.3 (81.2)	134.8 (322.5)	12.5 (85.0)	138.5 (270.6)	3.8 (▲51.9)
· 기타공공기관	9.4 (68.7)	8.9 (69.2)	▲0.5 (0.5)	9.7 (68.2)	0.9 (▲1.0)	10.1 (68.8)	0.3 (0.6)	10.5 (64.7)	0.5 (▲4.1)
▶ 중장기 재무계획(41개)	319.8 (139.3)	379.6 (170.5)	59.8 (31.2)	439.8 (206.3)	60.2 (35.8)	477.8 (235.2)	38.0 (28.9)	502.6 (232.4)	24.8 (▲2.8)
▶ 중점관리기관(18개)	270.2 (171.8)	324.4 (221.2)	54.2 (49.4)	378.7 (283.6)	54.3 (62.4)	410.2 (331.9)	31.5 (48.3)	436.1 (339.5)	25.9 (7.6)

주:1. 2009년은 K-GAAP, 2010~2011년은 공기업만 K-IFRS, 2012~2013년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K-IFRS 적용
2. ( )은 부채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기관의 부채규모) 41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기관의 2013년 실제 부채규모는 전망했던 규모보다 ▲17조원(520→503조원), 부채비율은 ▲12.2%p(244.6→232.4%) 감소함

〈분야별 부채규모 변화추이〉

(단위: %)

분야	2013년 예상 부채규모	2013년 실제 부채규모
LH	147.8	142.3
한국전력	107.6	104.1
예금보험공사	48.4	46.7
석유공사	19.3	18.5

– (중점관리대상의 부채규모) 18개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2013년 실제 부채규모는 전망했던 규모보다 ▲15조원(451→436조원), 부채비율은 ▲9.4%p(348.9→339.5) 감소함

– (전체 공공기관 순이익) 2012년 대비 흑자로 전환됨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비 증감
합 계	5.9	4.2	▲8.5	▲1.6	5.3	+6.9
· 공기업	3.6	2.3	▲0.5	▲3.4	▲2.4	+1.0
· 준정부기관	1.3	1.2	▲8.3	1.6	7.9	+6.3
· 기타공공기관	0.9	0.6	0.3	0.2	▲0.2	▲0.4
▶ 중장기 재무계획	4.5	3.2	▲9.2	▲2.1	4.9	+7.0
▶ 중점관리기관	3.4	2.5	▲12.8	▲8.1	▲3.2	+4.8

주: 2009년은 K-GAAP, 2010~2011년은 공기업만 K-IFRS, 2012~2013년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K-IFRS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 (공기업 순이익 현황) 공기업 중 18개 기관은 흑자인 반면 6개 기관*은 적자로 작년 대비 흑자기업의 수가 2개 증가함(연결기준, 발전자회사 6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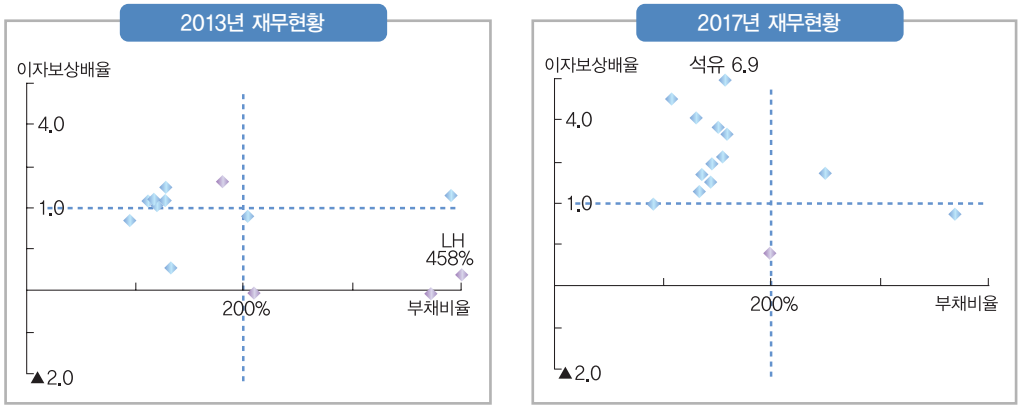
* 석유, 가스, 방송광고 ,석탄, 여수광양, 철도

•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규모와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재무상태는 취약한 상황

–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관 6개(전년대비 기관 수는 동일하나 도로공사가 제외되고, 수공이 신규로 추가됨)

–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작년 대비 2개에서 4개(LH, 석탄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로 증가함

– 정상화 대책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과 같은 부채감축 노력이 이행된다면 2017년까지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관이 11개(5개 기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1.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석탄공사는 부채비율 산출 곤란으로 제외
2. 보라색은 당기순이익 적자기관, 파랑색은 당기순이익 흑자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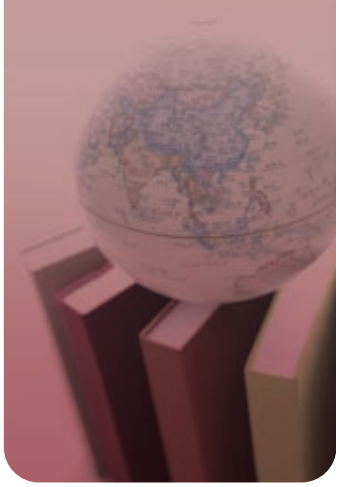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년 4월 29일)
  – 2013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년 4월 29일)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 본 동향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VII 연구동향

- 공공요금 원가 검증의 의의와 과제
-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 외국사례 연구
- 공기업 이사회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 연구동향은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학회의 최신 연구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공공요금 원가 검증의 의의와 과제

김소현 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요금의 원가검증 이유와 배경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2007년 말 249.2조원⇒2012년 말 493.4조원)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자보상비율 또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 경영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작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에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크게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개선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 되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부채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들 18개 공공기관[1] 중 5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원가를 국민으로부터 요금수입을 통해 회수하기 때문에 부채감축과 공공요금 조정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일례로, 한국전력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전기요금 억제가 최근 5년간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줄 수는 없다. 요금조정을 위해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기관 자체적으로도 경영효율화 ·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기관에 경영효율화 · 원가절감 등 강도

1)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제3의 검증기관으로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하여 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원가검증 진행상황 및 계획

원가분석팀에서는 회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산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업무는 본격적으로 2월에 시작되었으며 2013년 5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이후 이를 토대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2012년 원가자료를 토대로 기존 원가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항목별 원가절감 요인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원가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요금 간 상이한 원가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 간의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이 떨어졌고, 공공기관의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공공요금 원가계산시 포함되는 규제산업과 제외되는 비규제 사업 간의 구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구분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큰 이슈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경우 재료비의 비중이 2012년 총괄원가 기준으로 각각 86%, 94%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가오는 6월에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원가분석팀에서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원가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개선 방안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과제

그동안 정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관이 요금산정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2]에서 총괄원가 산정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 공공요금 산정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 · 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마련
②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 신설
③ 원가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④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및 이를 위한 회계분리 기준 마련
⑤ 요금산정용 보고서 작성 제출 및 필요시 제3자기관 외부검증

매년 6월 말까지 요금산정용 보고서 등을 기관에서 제출하면 제3자 검증기관이 참여하여 원가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이 서민물가와 직결된 문제이다보니 원가 이외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면서 요금조정 수준과 요금조정 시기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요금 원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요금결정 절차와 방식 또한 좀더 투명해지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공공요금 관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외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 원가정보를 확인하고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공공요금 투명성이 증대되고 기관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자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 외국 사례 연구

1. 5월 14일 kick off meeting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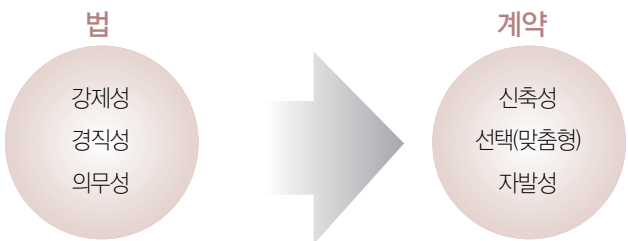
-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에 착수함

- 연구진 소개 및 담당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임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연구진 : 이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훈(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 연구 개요

■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는 법률에 의한 행정 행위의 경직성과 고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 시민과의 합의와 공동책임을 전제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행위 형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 공공기관을 설립한 후 공급하는 방식이 있지만,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면 공공주택의 경우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에서, 바우처 제도라는 일종의 계약을 통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신축적 사업 운영을 촉진함

■ 계약에 의한 행정 수행의 배경과 원인

- 규제국가에서 협력국가로의 이전 – 민주주의 보완과 강조, 협조적 법치국가
- 신공공관리론의 영향 – 시장경제적 요소의 강화
- 새로운 거버넌스에서의 공공정책의 실현방식

■ 정책수단으로서의 계약제도에 대한 국가별 법제 개관

1.영국

- 행정실무상 이루어지는 계약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계약에 의한 행정(government by contract)', '공공계약(public contract)' 등의 용어가 쓰임
- '계약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크게 ①정부조달계약, ②민간위탁계약, ③민관협력계약, ④정부와 자율구제기관 간의 협약, ⑤내부협약, ⑥공무원고용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구분 가능

2.미국

- 과거에는 배타적으로 정부가 담당하던 활동까지도 계약에 의해 민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
- 미국 행정계약의 방식은 ①조달계약, ②민간위탁계약, ③성과계약, ④규제계약, ⑤기타로 나눌 수 있음
-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과정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에서 통제하며 OMB는 이와 관련해서 Circular A-76을 제정
  - OMB Circular A-76(revised 2003)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상업적 서비스영역은 민간영역에서 경쟁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3.프랑스

- 프랑스의 행정계약제도는 조직법상의 행정계약과 공익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행정계약(공공조달,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획계약 등)의 모습을 보임
  - 전통적인 행정계약은 ①특허계약, ②공공조달계약, ③공모입찰계약, ④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⑤수익형 업무위탁계약, ⑥시설관리위탁계약 등이 있음
  - 행정계약이 공익을 추구하는 유형은 ①윤곽형 계약, ②수단형 계약, ③대상형 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 계획계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 혹은 국가와 국영기업 간 체결된 계약으로, 주로 지역개발 수행
  - 계획계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함

4.독일

- 독일의 행정계약 체계의 논의는 크게 세 범주로 구분
  - 첫째,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검토
  - 둘째, 조달계약의 경우 과거 사법상 계약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 경쟁제한방지법에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장을 두어 공공발주명령의 근거를 마련
  - 셋째, 민관협력에 관한 협력계약 논의 및 민관협력촉진법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에서는 공공서비스계약, 공공공급계약, 공공공사계약 등으로 계약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 현재, 민관협력에 대한 독자적인 계약유형인 “협력계약”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공기업 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이주경 · 김윤승 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기관 지배구조 중 하나인 이사회는 CEO의 자문에 응하고, CEO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등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자율책임 경영제도의 정착 및 방만 경영 예방 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OECD는 기업지배구조의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4개의 원칙[1]중 하나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공기관 관련 제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공공기관 이사회와 관련하여서는 이사

〈법 개정 전후의 이사회 변동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999년 정투법 개정	정부이사제도	당연직 정부이사 2인	폐지
	이사회 제도	비상임이사 체제	상임이사+비상임이사(과반수)체제
	이사의 수	10인 이내	15인 이내
	이사임면절차	사장 제청 → 주무부장관 임면	상임이사: 사장 제청 → 주무부장관 임면 비상임이사: 사장 제청 → 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 임면
	직원 임용 제도	집행간부 내부임용	상임이사에 외부인사 임용 가능
	이사 · 감사의 손해배상제도	미규정	법령, 정관위반, 기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법 준용하여 연대책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사회 의장	사장이 의장직 겸임 *일부 기관은 개별법에 따라 분리	이사회의장과 기관장 분리(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은 사장이 의장 겸임)
	사장 · 상임이사와의 계약	제도 없음	사장은 주무부장관과 계약체결하고, 상임이사는 사장과 계약체결
	이사회의 권한	제도 없음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	제도 없음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적 평가제도 도입

1) OECD가 1997년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의 4개 원칙은 ①주주의 권리(the rights of shareholders), ②주주공평성의 원칙(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③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공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④이사회의 역할(the role of the board)임

회에 대한 정부간섭을 줄이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흐름이 있어 왔다. 먼저 1999년에는 정부의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였고,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과거의 이사회 관련 논의들은 바람직한 공기업 이사회를 위한 개선방안를 모색하는 연구들(안용식, 1986; 이만우, 1999; 선우석호, 2000; 이상철, 2001; 곽채기, 2002; 김준기, 2005; 조택, 2007;김판석 · 홍길표 · 김완희, 2008; 유민수, 2010)이거나 이사회의 특성이나 구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선우석호, 2000; 선우석호, 2002; 원구환, 2007)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사회의 활동, 다시 말해 운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사회 제도의 대변화가 이사회 운영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총 13개 공기업[2]을 대상으로 제도 변화 시점인 1999년과 2007년 전후로 비교성과지표(이사회 개최횟수, 회당 안건 수, 회당 심의의결수, 원안 외 의결비율, 이사회 참석률, 비상임이사 참석률 및 발언비중 등)를 일원분산분석(ANOVA)를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기간별 대상 기관 및 비교지표〉

구분	대상기관	비교 성과지표
1999년 전후 비교 (1996~2002)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10개)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 안건 수, 회당 심의의결 수, 원안 외 의결비율
2007년 전후 비교 (2002~2012)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11개)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 안건 수, 회당 심의의결 수, 이사회 참석률, 비상임이사 참석률,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원안 외 의결비율

분석결과, 1999년도 제도 변화는 이사회 개최횟수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으나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양질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의 제도 변화는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 안건 수, 원안 외 의결비율,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07년의 제도 변화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의 통제

2) 13개 분석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며, 경영실적보고서의 한계상 시기별로 분석 대상의 차이가 있다.

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분석기간별 분석결과 요약〉

구분	유의미한 차이 있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1999년 전후 비교 (1996~2002)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 안건 수, 회당 심의의결 수, 원안 외 의결비율
2007년 전후 비교 (2002~2012)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 안건 수, 원안 외 의결비율,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회당 심의의결수, 이사회 참석률, 비상임이사 참석률

주: 유의확률 5%수준에서 F값을 판단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사회 운영성과가 높게 나타났을 소지가 있다. 또 통제기능을 나타내는 원안 외 의결비율의 경우, 사전에 이사회가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오히려 수정의결비율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사실 이사회의 운영이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언건수, 의안통과비율 등의 계량적인 수치자료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의 수준, 의안과의 관련성, 중요안건에 대한 통과 여부 등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준기,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사회의 구성원들의 행태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의지와 노력, 정부의 개선의지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편 집
이원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편집 총괄)
김신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실무 총괄)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이슈 & Talk)
정아름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의 눈 / 연구동향)
박미선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기관장 인터뷰)
송신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현장의 소리)
서니나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좋은 사례 나누기 / 정책동향)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의 모든 콘텐츠는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02-2186-2291)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4.05 (Vol.05)

2014년 5월 23일 인쇄
2014년 5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표), http://soe.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인 쇄 삼신인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13-5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